

# 〈경제민주화의 길을 묻다〉

2012 민주주의 배움터 자료집

- 일 시 2012년 10월 24일(수) ~ 11월 28일(수), 총6강
- 장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민주누리(교육장)
- 주 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 2012 민주주의 배움터 일정

강좌	제목	강사
제1강 10월 24일(수)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부소장)
제2강 10월 31일(수)	“한국인은 왜 죽도록 일만 하는가?”	강신주 (작가, 철학박사)
제3강 11월 7일(수)	월가 점령운동과 미국 경제민주주의의 위기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제4강 11월 14일(수)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과제”	송원근 (경남 과기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제5강 11월 21일(수)	“사회양극화와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제6강 11월 28일(수)	돈벌이 경제 VS 살림/살이 경제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차 례

제1강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	1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부소장 )	
제2강	“한국인은 왜 죽도록 일만 하는가?” .....	27
	강신주 (작가, 철학박사)	
제3강	“월가 점령운동과 미국 경제민주주의의 위기” .....	33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제4강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과제” .....	45
	송원근 (경남 과기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제5강	“사회양극화와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 .....	67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제6강	“돈벌이 경제 vs 살림/살이 경제” .....	77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김 병 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부소장)

### I. 머리말 : 2012년을 앞둔 한국사회 담론지형 변화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교훈

- 글로벌 금융위기는 범세계적으로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줌.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서 (1) 글로벌 자본 이동에 의한 금융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 유출입 통제가 필요하고, (2) 내수기반이 안정되어야 세계 경제 변동에 대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음. ⇒ 2012년 진보의 경제개혁 내용을 구성할 첫 번째 요소임.

#### ○ 양극화 심화, 보편복지 요구 확대(복지 담론의 확산)

- 최근 복지 담론의 확산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 생활고 압박과 사회 안전망 부족 실태를 반영하고 있음. 특히 2008~2010년 경제위기로 중산층들과 서민들 사이에서 교육문제와 주거문제, 고용불안 등이 심각해지자 이것이 무상급식요구를 매개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2012년 진보의 경제개혁에 영향을 줄 두 번째 요인임.

#### ○ 적효과 소멸, 재벌 대기업 개혁 이슈 부상

-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맞물리면서, 수출 대기업은 국내 경제와의 연계성 없이 해외 수출과 해외 생산으로 성장을 이어갔지만 내수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됨.

---

\* 이 글은 2011년 9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의 요약물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복지담론과 재벌개혁 담론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향후 한국 경제사회의 양대 주요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짐. ⇒ 2012년 진보의 경제개혁이 포괄해야 할 세 번째 필수 주제임.

○ **위험요소 증대, 체감경기 악화**

- 적하효과 소멸이라는 정책근간의 실패가 확인된 가운데, 수출대기업 성장과 국내 체감경기 악화의 간격이 커지고 있고, 이는 2012년 대선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글로벌 경제의 대외적 여건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추가적인 물가 불안, 가계부채 위험성 증대, 전세가격 상승추세 지속, 일부 건설사와 저축은행 추가 부실화 가능성 등 위험 요소가 확대되고 있음.

- 이들 4대 요인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경제에 뿌리내린 문제임. 따라서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발생 이전을 포함한 30년 동안의 한국경제 변화과정을 압축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고착된 핵심 문제와 원인을 구조화 하여 한국경제를 변화시킬 진보적 대안정책을 수립할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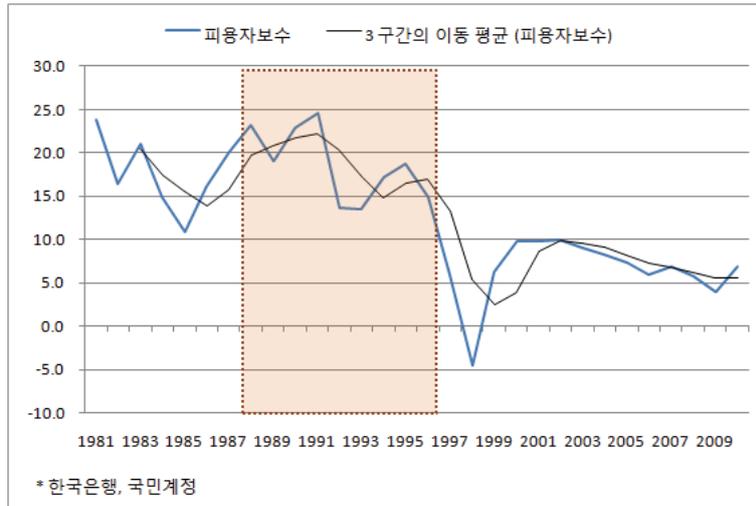
## II. 역사적 경험 : 1988~1996년 내수기반 경제의 좌절

### 1. 1988-1996년 시기 한국경제의 긍정적 측면 : 내수기반 확대

#### 1) 노동자 임금상승과 소득상승이 가장 빠르게 증가

- 시기는 연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8.3%였을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이는 2001~2010년 평균 경제성장률 4.2%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함.
- 일자리는 매년 50만개 가량 늘어남. 평균적으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고,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1994년~1996년 기간 동안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61%에 근접함.
- 1989년에 노동조합 조직률 20%, 조합원 수자 200만에 육박하는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감소하긴 했으나 현재의 조직률 10% 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
- 고성장 기조 유지, 노동조합 활성화, 취업자 수 증가를 배경으로 노동자 임금과 가계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임. 한국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명목상 피용자 보수가 매년 15~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그림 2-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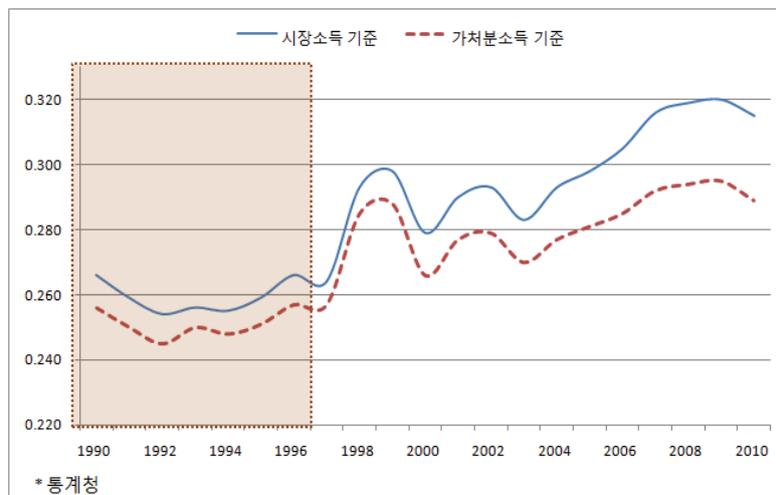
그림 2-1 : (국민 처분가능소득 중) 피용자 보수 증가율 변동 추이



2)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 완화

-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임금 몫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고 절대 분배율 값도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면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도 1990년대 초반에는 떨어지다가 이후 완만한 상승을 보이기는 했지만 2000년대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지속(그림 2-2 참조).
- 결국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졌으며, 2011년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사회목표가 '불평등 완화, 두터운 중산층 만들기'라면 그 목표에 가장 근접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2 : 지니계수 변화 추이(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 기준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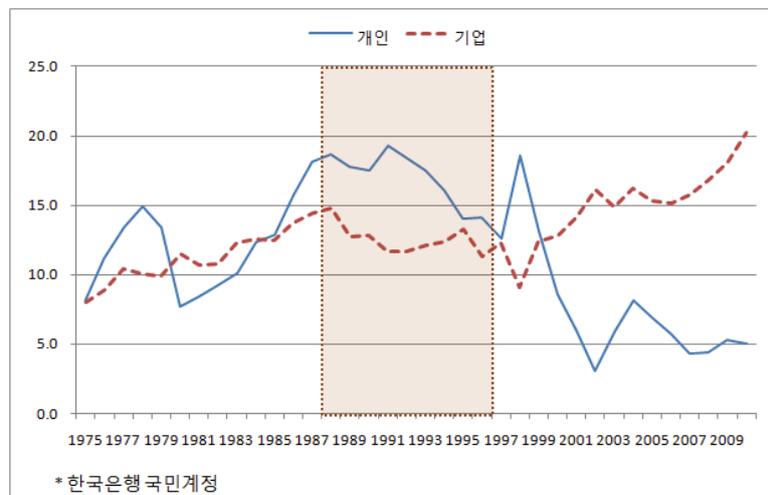


\* 도시 2인 가구 기준

### 3)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게 형성

- 소득 상승에 힘입어 가계의 저축률이 15%~20%사이를 유지하면서 기업 저축률을 크게 상회함, 반면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 1996년 까지만 해도 175조 원 정도로 2010년 가계신용 잔액 800조 원의 1/5에 불과했음(그림 2-3 참조).
-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가계저축은 극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기업 저축은 1990년대와 달리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을 빠르게 축소하고 내부 현금자산을 늘리고 있음.

[그림 2-3] : 개인과 기업의 명목 총 저축률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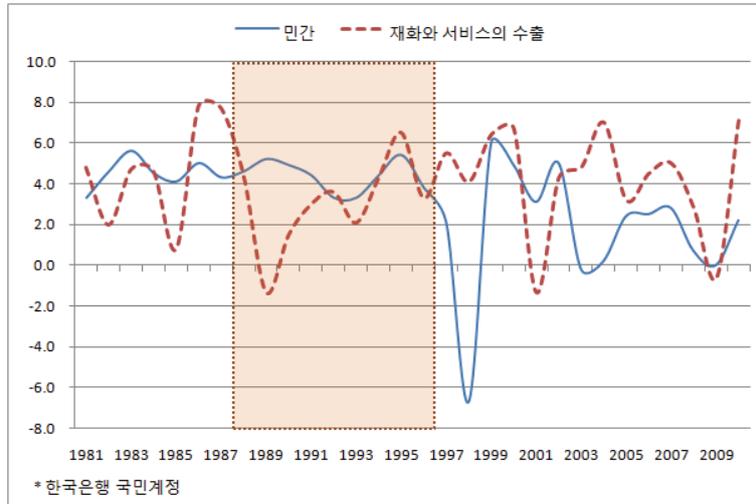
### 4)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

- 1990년대 상반기에는 부동산 매매 시장이 큰 상승 없이 일정한 가격 기조 유지. 반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은 1999~2003년, 2005~2006년 두 번에 걸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 서울지역 기준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올랐음.
- 주식시장도 대체로 종합주가지수 기준 600~1000 사이를 오가는 수준.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04~2008년 금융위기 시기까지 주가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00포인트를 돌파한 바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임.
- 결론적으로 1990년대 상반기는 실물적인 근로소득의 안정적 상승과 함께 자산시장 변동성이 2000년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음.

### 5) 국민 소득 향상에 기초한 내수시장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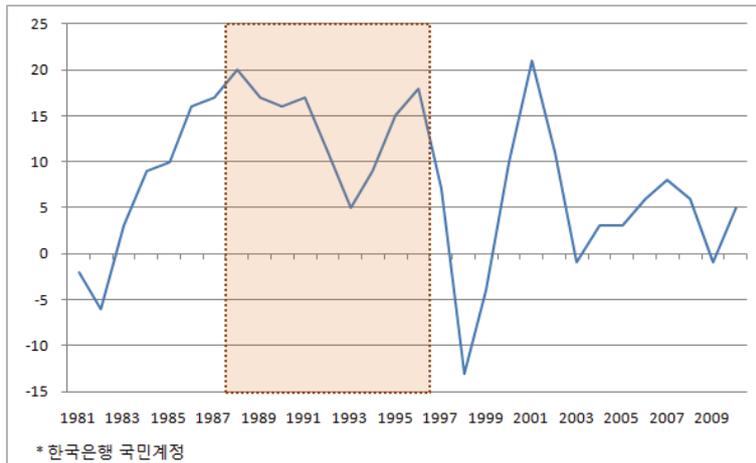
- 국민들의 소득과 저축의 상승으로 수출과 함께 민간 소비지출에 의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았음.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내수보다는 압도적으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았음(그림 2-4 참조).

그림 2-4 : 민간소비지출과 수출의 성장 기여도 비교 추이



- 국내 민간 소비가 팽창하자 기업들이 국내 설비투자도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대함. 1988~1996년 동안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13.1%였음. 반면 2001~2010년 동안에는 3.8%에 불과함(그림 2-5 참조).
- 재벌 대기업은 1990년대 팽창하는 내수에 의지해 성장을 해 왔지만, 2000년대부터는 수출과 해외생산 확대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바꿈.

그림 2-5 : 실질 설비투자(3년 이동평균)증가율 변동 추이



#### 6) 내수를 기반으로 재벌 대기업의 자본, 기술축적

- 국민의 소득 상승 → 구매력 상승 → 민간소비지출 증가 → 내수시장 팽창은 국내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도약의 계기로 작용. 재벌 계열의 주요 대기업들은 자본축적과 기술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됨.

- 그 결과 1980년대까지의 조립가공기업에서 벗어나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에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동했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첨단산업 방향으로 전환.
- 재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면서 정부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임.(1992년 재계 총수였던 정주영 현대 회장 대통령에 출마).

## 2. 1988-1996년 시기 한국경제의 부정적 측면 : 신자유주의 확산과 외환위기로 귀결

-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소득상승 → 불평등 완화 → 내수기반 확대라고 하는 우리경제의 긍정적 측면이 발견되지만, 동시에 동구 사회주의 붕괴와 세계적 신자유주의 확대의 영향으로 긍정적 측면이 질식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들도 확대됨.
-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1996년 OECD가입을 위해 미국이 요구한 금융 자유화를 서두름. 결국 무리한 금융시장 개방은 은행과 중금사들의 해외 차입 길을 터 주었고, 이것이 재벌 대기업들의 해외 팽창에 따른 자금 수요와 맞물리게 됨.
-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해외 자본의 자금 상황 압박이 아시아 전역에 번지자 곧바로 한국도 외환위기에 빠짐. 해외 자본의 대규모 유입 → 대기업의 과잉 차입과 투자 → 대기업의 부실 → 대규모 자본 유출 → 외환위기라는 경로를 따라 한국이 아시아 외환위기에 휘말리게 됨.
- 결국 외환위기는 한국경제를 1996년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분기점이 됨. 기업들이 단기 수익성을 목표로 경영전략을 바꾸고 고용 유연화정책이 속속 도입되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용불안이 확대되어 전반적인 국민의 실질 근로소득 수준을 떨어뜨리고 실질 구매력을 악화. ⇒ 두터워가던 중산층이 붕괴하고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
- 또한 기업금융 대신 소매 금융이 크게 확대되는 등 금융화 현상이 확대 되면서 실물경제는 4%대의 성장률에 머무르는 대신 자산시장 거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시작함.
- 이 와중에 재벌 대기업들은 내수 시장 대신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철저히 수출위주의 성장 전략을 구사함. 국내 경제와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고 재벌 대기업 주도의 한국형 발전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임. ⇒ 한국형 발전 모델의 종료.

### 3. 소결

- 1988~1996년 한국경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전이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는 확연히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한국경제의 전 역사적 시기를 통틀어 자본주의 틀 안에서나마 긍정적인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1987년 이전의 대외 의존 경제, 재벌 중심 경제, 열악한 노동 환경 등 기존의 부정적 측면 역시 1988년 이후에도 유지되었음. 여기에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경제를 서서히 잠식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 까지 축적하게 됨.
- 이런 점에서 1988~1996년 시기는 한국경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게 되는 특수한 국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종의 ‘이중 경제’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외환위기로 인해 긍정적 측면이 소멸하고 부정적 측면이 전면화 되는 것으로 결론).
- 결국, 1990년대 전반기 내수기반이 확대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기회를 우리경제 체질 개선과 불평등 완화를 정착시키는 데로 활용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도입을 서두르면서 현재의 양극화가 본격화함.

## III. 외환위기와 한국경제의 성장모델 및 대외적 환경 변화

### 1. 한국형 발전모델 변화(신자유주의 모델 수용)

- **(국가와 기업사이의 권력관계 변화 조짐)** 자본과 기술을 축적해온 재벌 대기업들이 일부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경제력을 키우면서 국가 권력의 그늘을 벗어남. 국가와 재벌 대기업 사이의 권력관계 변화가 구체적으로 가시화. 1960년대 이래의 국가주도 발전모델이 약화되었음을 의미.
- **(자유시장 이념 확산 및 신자유주의 모델로 전환)** 외환위기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금융 자유화와 세계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잘못된 개입(관치경제)이나 재벌의 후진적 경영 측면만이 부각되면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추진됨. 국가 역할 축소와 재정, 통화정책 변화, 기업 경영 방식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과 자본시장 자유화가 담론 경쟁에서 승리함.

- **(금융시장의 급진적 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 추세는 1998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주식 지분소유제한 철폐와 자유변동 환율제 도입으로 인해 완전히 자유화되고 개방 됨 ⇒ 이후 외국자본 유출입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함.
- **(작은 정부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재정지출 축소, 물가 단일 목표제로의 통화정책 전환, 산업 정책의 사실상 폐지 등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전환됨. ⇒ 국가가 수행해야 할 소득 재분배나 고용확대 등을 방지하는 무책임한 정부로 전환됨.
- **(단기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 행태의 변화)** 신자유주의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관행이 도입됨. 한편에서는 과배당 요구, 장기투자 기피, 주가 관리를 위한 현금 보유 확대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외주 용역 등 노동 유연화가 도입됨.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변화)**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됨. 그 결과 노동 내부의 차이가 확대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 내부의 소득 분배구조도 악화시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기 시작함. ⇒ 내수 기반 약화를 발생시킴.
- **(수출주도 성장 모델 확대)** 수출 대기업의 성장과 국내 내수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대기업의 해외발생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경제력 집중도 역시 강화됨. ⇒ 대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약화. 대기업의 경제권력 확대.
- **(버블경제: Plutonomics)**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소매 금융이 대폭 늘어나면서 가계 부채를 동원한 자산시장의 거품이 형성. ⇒ 소득 증가를 뛰어넘는 부채의 지속적 팽창으로 이어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누적시키게 됨.

[표 1]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발전모델 성격 변화

1988~1996	외환위기 이후
고용 안정성	고용 불안정성 → 비정규직 양산
평균적 소득 상승	평균적 소득 정체
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 불평등 확대 → 워킹 푸어
높은 저축률 유지	낮은 저축률, 높은 부채
내수기반 확대 + 수출	내수시장 위축 + 수출 편향 기업성장
장기적 기업 전망아래 투자 확대+과잉투자	단기 실적 위주 경영, 대외투자 팽창
경제와 기업에 대한 국가통제 잔존	기업 권력의 독립과 사실상 우위 형성
은행을 통한 금융조달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조달
기업 금융 중심	가계 소매금융 중심 → 가계 부채
자본시장 통제 + 제한적 자유화 시작	자본시장 자유화 → 자본시장 변동성
자산시장 상대적 안정	자산거품 본격화 → 부동산 가격 폭등

## 2. 환경변화1 : 금융세계화와 글로벌 자산거품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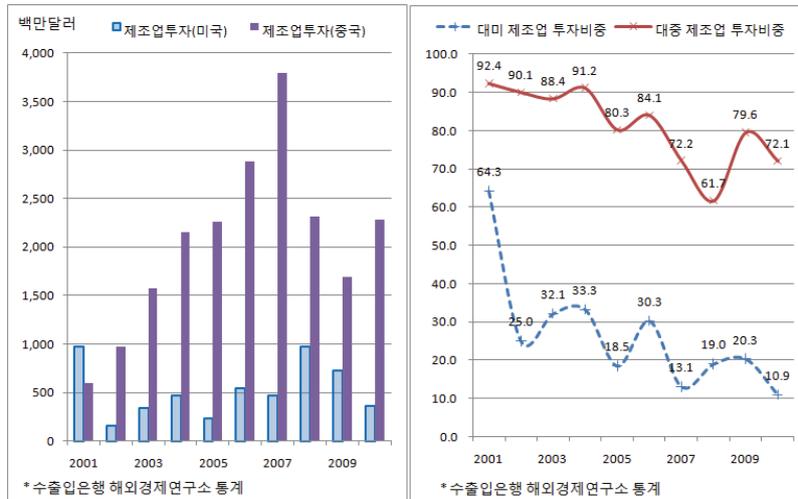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대 이후 시작된 금융 세계화가 극단을 치달으면서 부동산 거품을 촉발시키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거품이 붕괴되었다는 점.
-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1980년, 세계 GDP와 금융자산 규모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1990년에 금융자산(43조 달러)이 GDP(21조 5000억 달러)의 두 배가 넘게 성장했고, 2006년에는 거의 3.5배가 되었음. 제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가 금융의 지배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음을 보여줌.
- 금융 내부에서도 무게 중심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함. 198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체 금융자산에서 은행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지만, 2006년에는 27%로 떨어짐. 같은 기간 은행예금이 7.8퍼센트 성장하는 동안 주식시장이 10.4%나 빠르게 성장한 결과임.
- 특히 파생상품 시장은 명목적 가치로 보면 파생상품을 제외한 세계 금융 자산 167조 달러의 세 배인 477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함. ‘세계 GDP 48조 달러 → 금융 자산 167조 달러 (파생상품 제외) → 파생상품 시장 477조 달러 구조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임.
- 금융의 급격한 팽창과 2000년대 상반기의 장기 저금리 기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자

금이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부동산 대출은 파생상품 기법에 의해 유통화 되면서 증폭되었음. 결국 2006년까지를 정점으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었고, 연쇄적으로 금융거품 붕괴를 초래하게 됨.

### 3. 환경변화2 : 중국경제의 부상, 중국효과에 의한 한국경제의 성장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은 중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부상임.
  - 중국은 명목 GDP규모면에서 2010년 5.88조 달러로, 세계 2위 일본의 5.47조 달러를 추월함으로써 1968년 이후 40년 넘게 지켜온 일본의 지위를 무너뜨렸음.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로 2005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비중임.
  -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조 5천억 달러에서 2011년 3월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섬.
-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실물경제와 상품 무역에서 중국경제와의 연관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됨. 2000년대에 한중 무역은 한국 실물경제 변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됨.
  - 2000년 한국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수출 10%, 수입 8% 비중으로 정확히 미국 의존도의 절반에 불과했음.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수출 가운데 25%를 대중국 수출이 차지함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역전됨. 수입도 최대 수입국이었던 일본마저 중국이 대체하기 시작함.
  - 2008년 상반기에서 2010년 상반기 2년 동안 한국경제 GDP성장률 4.2% 가운데에서 그 절반이 넘는 2.2%는 대 중국 수출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산업연구원)
- 한중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율이 700%에 달할 만큼 막대한 자체 자금조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반면 중국경제의 성장 여부에 따라 기업 실적이 영향을 받는 구조임.
- 2000년대 한국경제에게 중국은 해외 투자와 해외 생산기지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됨. 특히 2007년 이후도 중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평균 70% 이상 제조업 투자가 유지되고 있음). (그림 3-1 참조)

그림 3-1 : 대미, 대 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추이



#### 4. 소결

-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 1990년대 전반기부터 세계화와 금융 자유화 추세가 점차로 확산되었는데, 이것이 재벌 대기업들이 팽창 전략과 맞물리면서 과도한 해외 차입을 증대시켰고 외환위기라는 파국적 국면을 맞음. 외환위기는 그 이전까지의 한국경제 발전 모델과는 다른 신자유주의적 모델로 교체되는 분수령이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변화된 궤적이 지속됨.
- 또한 대외적으로 한국경제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환경에 직면하게 됨. 하나는 금융 세계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여파로 자산시장 거품이 확대되는 반경 아래에 한국경제가 편입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성장해온 것은 물론 소비시장의 지위까지 얻음에 따라 한국과 중국사이의 무역 의존도가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사실임.

### IV. 2011년 한국 사회경제의 핵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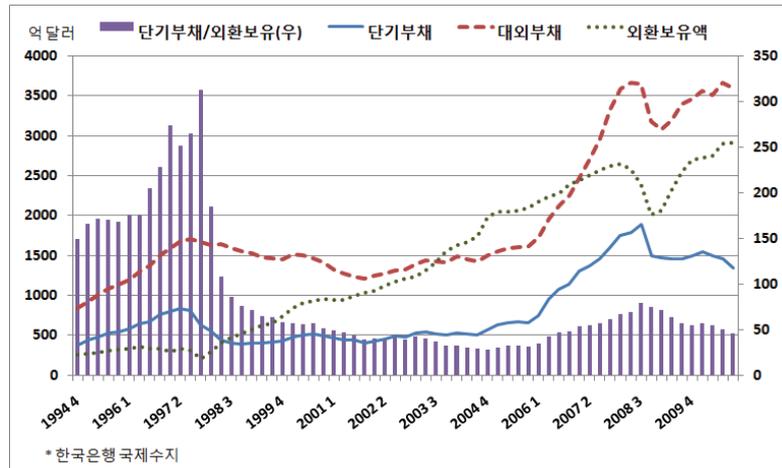
#### 1.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 1)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한국경제

- 1990년대 전반기 외화 차입 자유화 등 부분적으로 외환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 외화 차입이 증대하고 이를 통한 재벌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함.
- 그러나 이 조건에서 다시 환율이 평가 절상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성장률이 둔화되자

1997년부터 부채를 건디지 못한 대기업 부실이 시작되었고 차입된 외자의 일시상환 요구가 물리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함.(그림 4-1 참조)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의존형 성장모델이 더욱 고착되면서 한국경제는 환율 변동에 훨씬 큰 영향을 받음.

그림 4-1 : 한국의 대외 부채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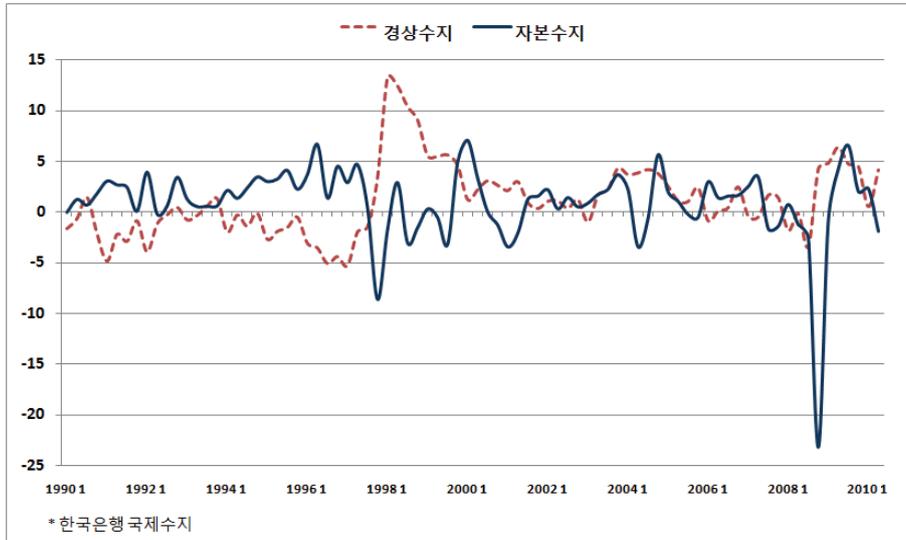


-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한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 2600억 달러는 외환위기를 방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방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각한 금융충격에 시달려야 했음. 자본시장에서의 외환 유출입 규모가 컸기 때문임.
- 한편,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풀린 외환을 매입하면, 시장에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됨(통안 증권에 대한 이자부담은 1997년에는 3조원 규모였으나 10년 뒤인 2007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7.8조 원).

## 2)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 외환시장 자유화와 자본시장(주식, 채권시장) 자유화가 확립된 조건에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은 곧 바로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됨. 외환위기 이후 자본 유출에 따른 환율 평가 절하는 97년(외환 위기), 01년(IT버블 붕괴), 04년(신용카드버블 붕괴), 08년(글로벌 금융위기) 네 차례 있었음(그림 4-2 참조).

그림 4-2 :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변화 추이(단위 억원)



- 자본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은 직접 투자, 증권투자, 기타 투자임. 이 가운데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1년 사이에 주로 순유입(구조조정 대상 기업들 해외 매각 등)되었으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국내 유입된 외국인 투자 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국내 기업의 대외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자본 유출입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접투자 보다는 파생금융상품투자를 포함한 증권투자(주식 및 채권 투자)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기타투자(국내 금융기관의 단기대출 및 외국인의 단기예금)는 금리 및 환차익을 노리고 유입된 단기자금을 말하는데, 이들 자금은 특정 금융사건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이탈하는 것이 특징임.

[표 2] GDP 대비 비중: 증권투자는 파생금융상품투자 포함

	증권투자 (유입)	증권투자 (유출)	기타투자 (유입)	기타투자 (유출)
1990~1994	1.78	-0.4	2.12	1.58
1995~1999	2.9	-1.12	2.34	2.84
2000~2004	2.75	-1.23	1.52	1.96
2005~2010.2q	6.28	-6.22	3.18	2.31

- 예를 들어 06년 1분기~08년 1분기 2년 동안 GDP 대비 평균 6%를 초과할 만큼 외국인의 단기 투기자금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지만 08년 4/4분기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GDP 대비 20.2%가 급격히 이탈(증권수지를 포함하면 50%에 달함)한 바가 있음. 그 결과 2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도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음.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 1998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 시행 이후 환율변동성은 뚜렷이 확대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 최고조에 이룸. G-20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일 대비 원화 환율 변동성이 0.37%로서 중간 수준인 열 번째를 기록했으나, 위기 동안에는 브라질, 남아공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69%를 기록함.

[표 3] GDP 대비 비중; 증권투자는 파생금융상품투자 포함

	외환위기 이전 (90.3~97.12)	리먼사태 이전 (98.1~08.9.12)	글로벌 금융위기 (08.9.15~09.3)	09.4월 이후
원/달러 환율	794.3	1,139	1,371.8	1,188.6
전일대비 변동폭	2.30	4.5	22.7	7.0
전일대비 변동률	0.21	0.37	1.69	0.58
내재 변동성	-	7.56	41.4	15.3

\* 인용: 한국은행(2011),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

-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원화는 아세안 국가들보다도 변동성이 심했는데,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보다는 4배, 태국이나 필리핀 보다는 2~3배의 변동성을 기록한 바가 있음.

2. 신용주도 버블경제(신용팽창에 의한 거품형성 및 붕괴)

1) 자본유출입 변동에 따른 경기 증폭성

-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자본 유출입 변동성은 외부에서 발생한 거품형성과 붕괴 사이클이 국내 경제로 침투하는 고리로 작용함. 특히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것은 은행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해외 단기외채가 급등하면서 발생함.

[표 4] 기간과 형태별 주요 외국인 자본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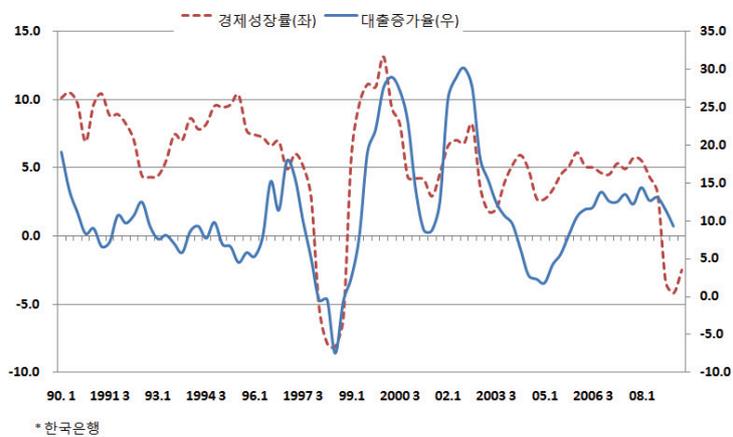
구분	유입 형태	유입규모(억 달러)	GDP 비중
1994.2~97.3	기타투자	517.6	13.7→21.7
1998.1~01.4	직접투자	390.4	3.1→10.5
2003.2~07.3	증권투자	3511.6	16.4→43.1
2006.1~08.3	기타투자	1222.7	11.2→22.4
2009.2~	증권투자	2467.5	34.1→46.1

- 자본시장을 매개로 외부로부터 신용거품이 촉발되는 경우는,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 국내 신용 확장 → 자산시장 버블 → (위험 과소평가) → 민간소비/가계부채 증가/환율 평가절상 → 수출경쟁력 약화, 가계/금융회사 취약성 확대 → 통화 만기 불일치라는 경로로 전달됨.

## 2) 국내 신용시장 내부에서의 경기 증폭성

-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의 또 다른 공통성은 경기 활황기에 CD, RP, 금융채, 외화 부채와 같은 은행의 시장성 수신(비 예금성 부채)이 증가하면서 예대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데서 기인하기도 함.
- 즉, 담보가치 상승 → 리스크의 과소평가 → 느슨한 금융 감독(BIS 비율 확대, 대손충당금 축소) → 금융회사의 자산 확대 경쟁 → 금융회사의 신용확대가 반복됨.
-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및 수신 구조(시장성 수신 증가),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변화, 경제 전반의 금융화 추세에 따라 경기 동조성이 더욱 강화되는 특징이 있음(그림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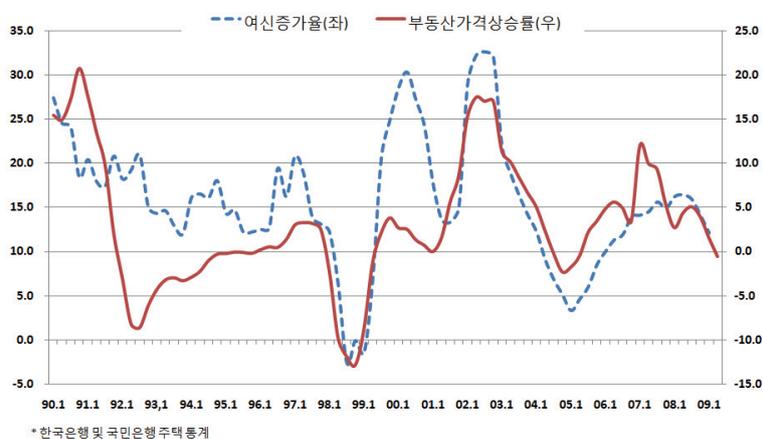
그림 4-3 : 은행 대출 증가율과 경기변동의 관계



## 3) 자산시장의 경기 증폭성, 부동산 가격의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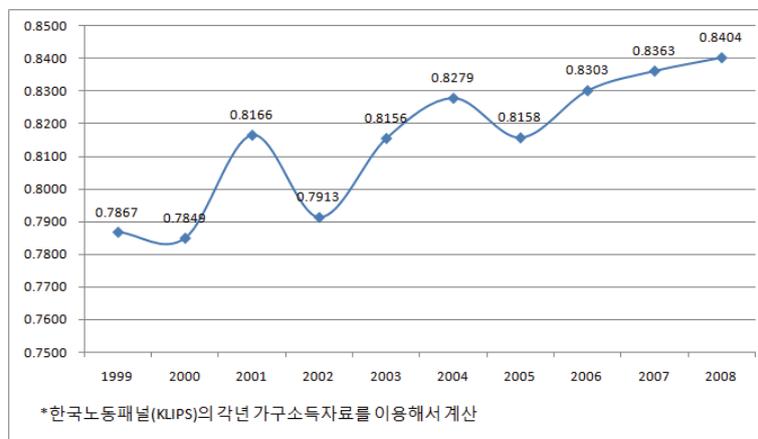
- 신용 공급의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자산(대출) 수요 증가 → 자산 가격 버블 → 담보가치 증가 +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대출능력) 증가 → 민간소비 증가라는 사이클로 자산시장의 거품이 형성됨(그림 4.4 참조).

그림 4-4 : 대출 증가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의 관계(명목지수)



- 2000년대 초반기에서 카드 대란 시점까지,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두 번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있었음.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증가는 대체로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에 따라 발생했음. 이는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로 금융 공급이란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신용팽창을 배경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자산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서 알 수 있음.(그림 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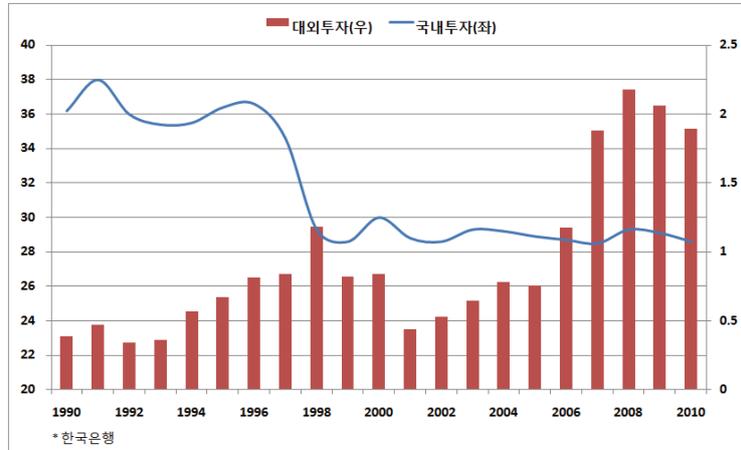
그림 4-5 : 자산 지니계수 변화 추이(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포함)



### 3. 주주자본주의 단기경영 관행

- **(배당률/배당성향 증가)** 외국인 주식 소유비율 증가로 미국형 단기 주주가치극대화 경영방식 도입됨. 그 결과 과거 사내유보를 통한 재투자 모델에서 주가부양중시 모델로(감량경영, 배당, 자사주매입), 배당률 증가로(1997년 제조업 배당률 3.2%에서 2007년에는 15.31로 5배 증가), 경영자 보수 증가로 전환했고 인수합병 사례가 늘어나게 됨.
- **(해외 투자 증가)** 비용절감과 수익성 위주 경영은 해외투자를 늘어나게 했음. 그 결과 GDP에서 국내투자(총고정자본형성)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38%에서 2010년 28.6%로 줄어듦. 반대로 GDP에서 해외직접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까지만 해도 0.83%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2.17%까지 거의 3배가 증가함.(그림 4-6 참조)

그림 4-6 : 국내 투자와 대외 투자 비중 변동 추이



- (기업가정신 쇠퇴)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신규 투자 보다는 인수 합병 선호, 사내 유보율 급증.

#### 4.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 권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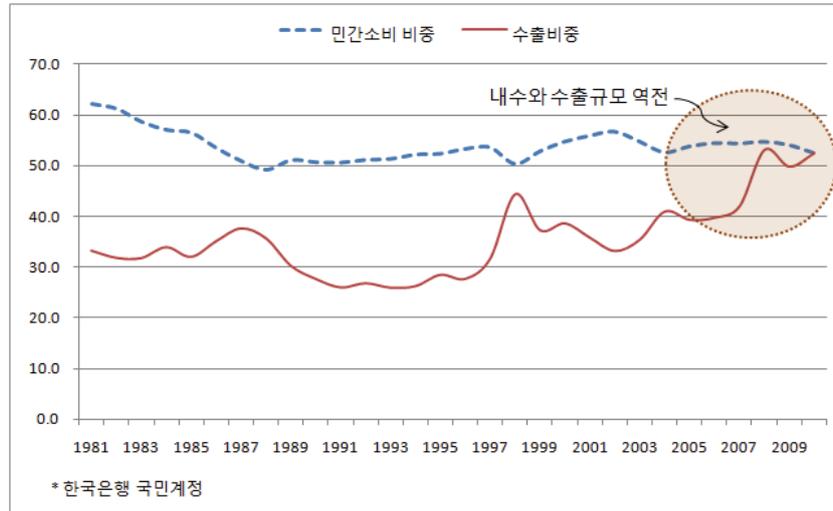
##### 1) 외환위기 이후 재벌 개혁 평가

- 김대중 정부는 5+3 재벌개혁 추진. 2001년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제도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족벌경영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
- 그러나 주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경제력 집중 해소는 부차적으로 취급됨. 한편 벤처산업 육성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완화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벤처 거품 붕괴로 효과 소멸.
- 참여정부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의 유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함.
- 순환출자 구조나 소수지분에 의한 총수 지배력 등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함. 그러나 지주회사법에서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

##### 2) 수출편향 대기업 성장 모델 고착

- 외환위기 경험은 외환보유고 축적을 위한 수출전략을 부각시켰고 이를 위한 환율정책이 수립됨. 또한 고용 불안으로 국내 소득여력이 부진하면서 국내적 내수기반이 약화되자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 위주의 경영전략을 강화하게 됨.
- 그 결과 민간소비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2010년 2분기 이후부터 수출규모가 민간소비 규모를 앞지르게 됨. (2010년은 연간 기준으로 민간소비 비중은 52.5%, 수출비중은 52.4%)임(그림 4-7 참조).

그림 4-7 :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와 수출 비율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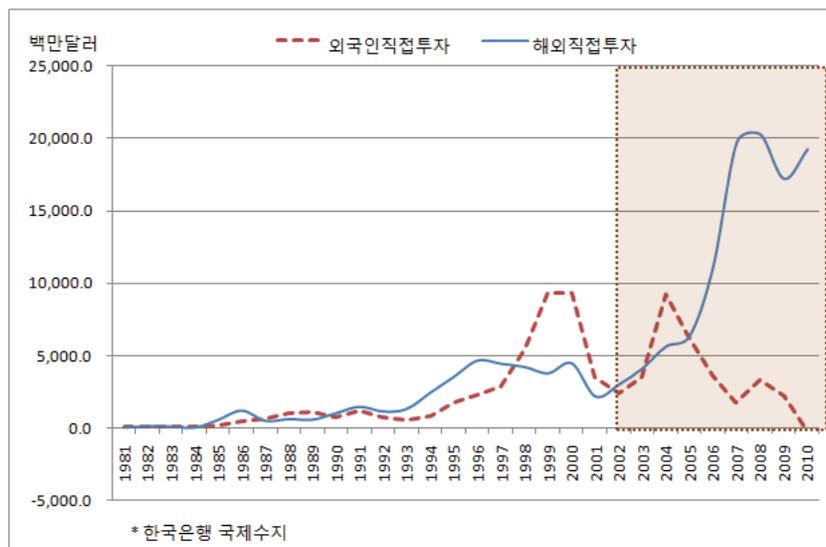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미국의 70.6%, 독일의 57.9%, 일본의 58.6%보다도 매우 낮은 비중임. ⇒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시작되었고 이는 특히 2008년 경제위기로 더 확대되었음.

3) 해외 생산기지 구축과 대외투자 확대

- 재벌 대기업 집단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투자와 국내 고용을 늘리기 보다는 해외 생산기지 구축에 주력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2002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고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정에서 더욱 증폭되어 나타남(그림 4-8 참조).

그림 4-8 :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과 외국인 국내직접 투자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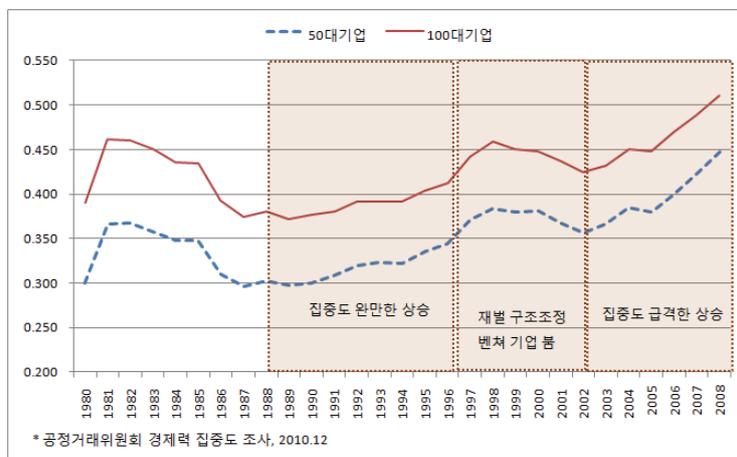
- 현대차 그룹의 경우, 2009년 기점으로 해외생산 자동차 대수가 국내생산 대수(내수용 + 수출용)

를 추월하는 현상까지 발생함. 이는 재벌 대기업의 성장과 수익 확대가 국내 고용이나 중소기업의 성장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내경제와의 선순환 구조 단절.

4) 경제력 집중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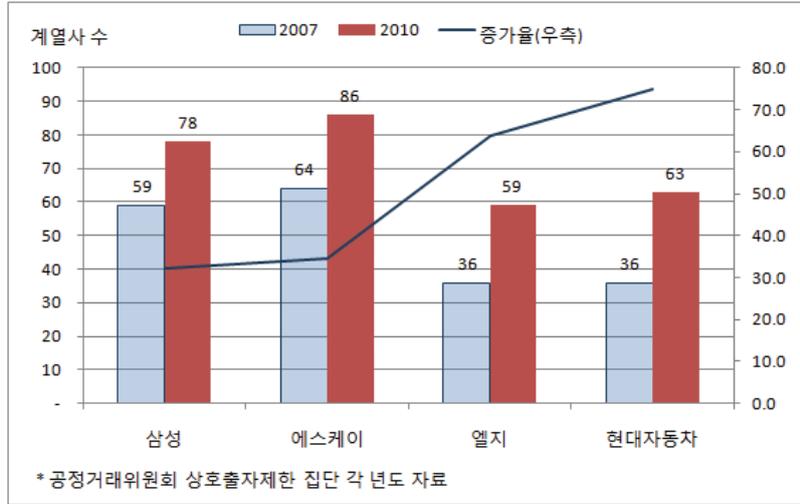
- 일반집중도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몰락, 대기업 빅딜과 구조조정으로 급격히 증가하다 벤처 열풍에 힘입어 다시 급격히 하락함. 그러나 2008년 말 현재 상위 50대 기업은 집중도 44.7%, 100대 기업은 51.1%로서 1980년대 이래 최고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음(그림 4-9 참조).

그림 4-9 : 총 출하액 기준 일반 집중도 변동 추이



- 특히 4대 그룹(삼성, 현대차, LG, SK)의 총 매출액은 2010년 기준으로 603조 원에 이르러 전체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 대비 50%를 상회함. 2008~2010년 동안 연 평균 16.2%의 놀라운 매출 신장률을 기록함.
-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열사 수도 급격히 늘어남. 2007년 대비 계열사가 최소 30%이상 늘어났음.(그림 4-10 참조)

그림 4-10 : 4대 그룹 계열사 수 변동 추이(2007년 대비 2010년 현재)



-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는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 대기업 법인세 감세 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회율 유지 정책 등 '3대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인해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이 심화되었음.
-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에서 주요 기업과 기업 집단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으며 2008년 대기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 집권과 금융위기로 인해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함. ⇒재벌개혁의 주요 목적이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으로 변하게 됨.

#### 4) 통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화

- 한국의 재벌 대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차, LG, SK를 주축으로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 경제권력'으로 부상했음.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오르면서 수출비중과 해외생산 비중을 키웠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지해 줌.
- 반면, 국민들은 1990년대와 달리 경제의 금융화, 고용 유연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자산 거품까지 확대되면서 이른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구조화 함. ⇒ 재벌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 시스템

### 5.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의 확대

#### 1) 한국경제 양극화 확대 구조

-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이 발생시킨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임. 양극화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내부(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 노동 내부(정규직과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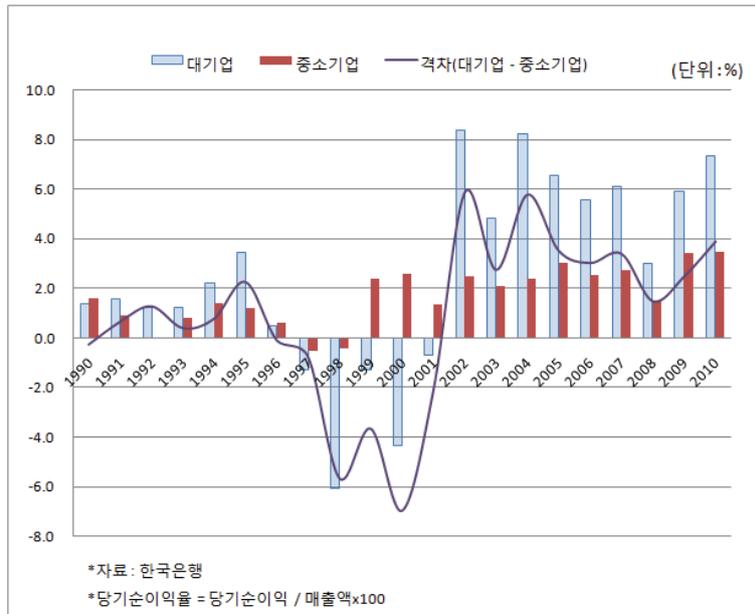
등)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으로부터 시작되는 성장의 적하효과는 사라졌지만, 양극화의 적하효과가 작동하고 있다’ 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임. ⇒ 2000년대 한국 사회경제의 최대 난제로 등장.

##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금융비용을 줄이고,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국내적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임금 비용을 줄이는 한편,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부품 원가 비용을 떨어뜨림.
- ‘전속 거래’ 등의 형태로 국내 중소기업의 43%정도가 대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와 해외 부품조달 움직임은 하청 중소기업의 이익률 하락으로 귀결됨(그림 4-11 참조).

그림 4-11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순이익률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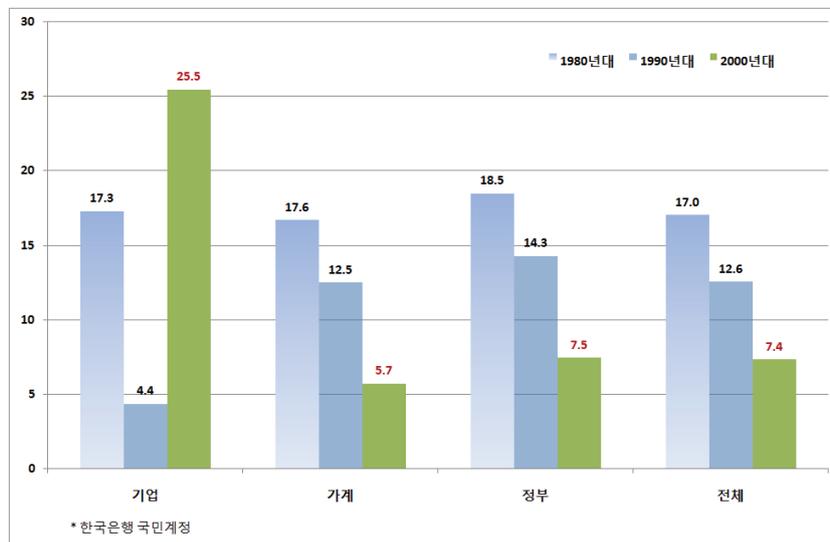


- 그 결과 전 산업기준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87%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률은 절반 수준, 생산성은 1/3수준에 불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 ⇒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로, 노동자의 양극화로 전이됨.
- 중소기업의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 중소기업에로의 고급 인력 유입 곤란 → 기술개발 능력 약화 → 저 생산성 → 저 수익성 → 저 임금 → 저 기술력 유입” 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구조화시킴.

## 3) 기업과 노동(가계)사이의 소득 양극화

-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수익률 양극화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과 노동 사이의 성장 과실 분배구조를 왜곡시키고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게 됨. 2000년대 10년 동안 기업소득은 연평균 증가율이 25.5% 인데 비해 가계소득은 5.7%에 그치고 있음. 그 결과 가계소득은 전체 국민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그림 4-12 참조)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해외 생산과 해외 아웃소싱, 그리고 고용 유발이 적은 IT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의 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대량 양산,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으로 노조 협상력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임.

그림 4-12 : 국민 처분가능 소득 중 기업, 가계, 정부의 증가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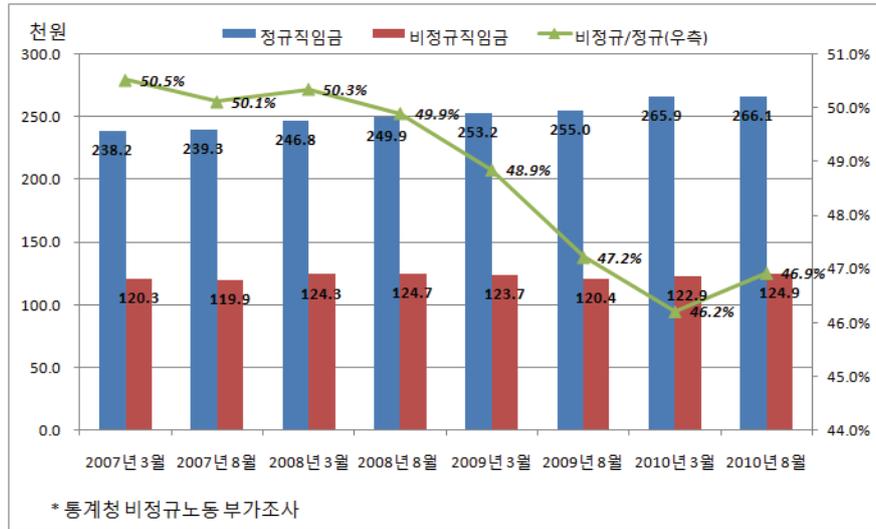


- 기업과 노동사이의 소득 증가율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은 1996년 62.5로 최고점에 올랐다가 외환위기로 급격히 추락했고 최근 경제위기로 재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2010년 59.2%).

#### 4) 고용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적, 질적 양극화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노동내부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축으로 심각하게 발생함. 2000년대 초반 비정규직 비율은 56% 이상(한국 노동사회연구소 기준)까지 올라가면서 정점에 이르다가 이후 지표상으로는 점차적으로 양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8월 이후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까지 감소함.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감소함(그림 4-13 참조).

그림 4-13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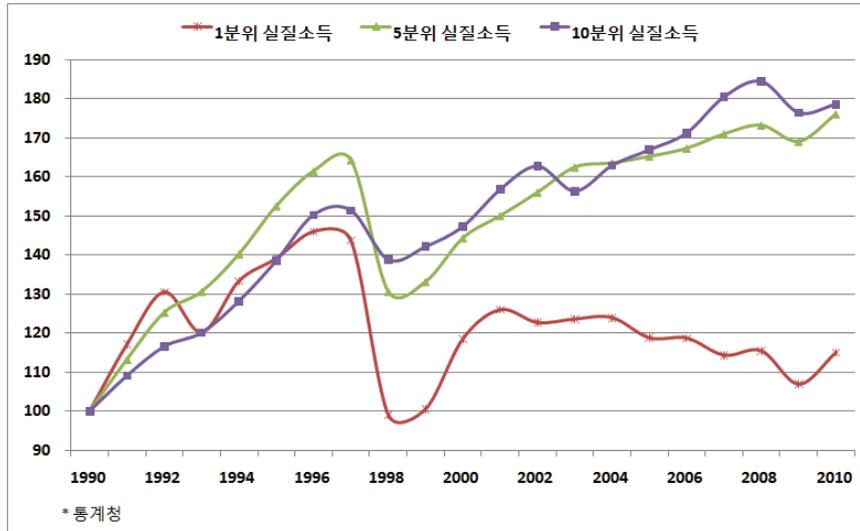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성 격차, 임금격차뿐 아니라, 복지 수혜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현재 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비율은 거의 100%에 근접하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 되는 30%를 약간 웃도는 수준.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사회보장서비스)의 제공은 임금외적인 부분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5) 소득의 양극화와 소득분배율의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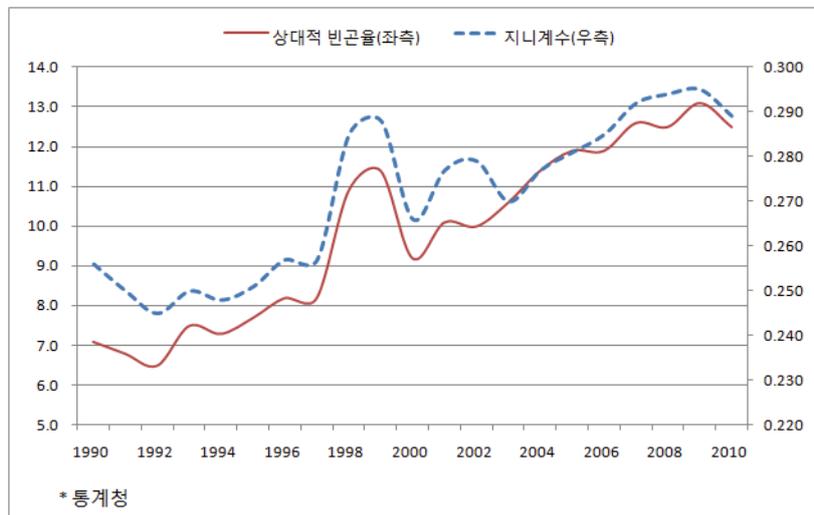
- 1990년대는 5분위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10분위 가구보다 컸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상위 10% 고소득층으로 소득상승이 집중. 반면 저소득가구는 2000년대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폭이 큼(2인 이상 도시가구를 기준). (그림 4-14 참조)

그림 4-14 : 소득 계층별 실질소득 증가 추이(1990년을 100으로 했을 때)



- 최근 경제위기를 겪은 2009년에는 빈곤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결국 고용의 양극화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를 증대시켰고, 이는 저소득 가구의 증가와 가구의 소득불평등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짐(그림 4-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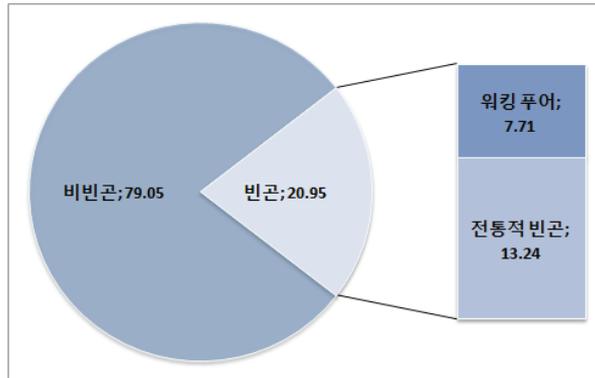
그림 4-15 :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 변화 추이(가처분 소득 기준)



## 6) 빈곤의 확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는 워킹푸어(근로빈곤층) 문제를 낳고 있음. 2010년 1분기 현재 국내 워킹푸어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7.71%임.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면 이러한 워킹푸어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그림 4-16 참조).

그림 4-16 : 2010년 1분기 워킹 푸어의 규모



\* 출처: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 고용 양극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를 더욱 크게 했고 이는 소득불평등의 확대와 함께 중산층의 비중을 줄이는 소득양극화라는 결과를 가져옴. 더욱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증대와 함께 아주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증대하였고, 이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확대시킴.

## 6. 소결

- 2000년대 한국경제는 금융 세계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을 때까지 금융과 실물 영역에서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됨.
- 금융영역에서는 (1)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2) 신용팽창에 의한 자산 거품이 형성됨. 실물영역에서는 (3) 기업의 주주자본주의적 단기 경영관행이 등장하고 (4)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과거보다 훨씬 심한 구조로 진행됨. 그 결과 (5)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한국사회의 최대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으면서 악화되었음.

[표 5] 한국경제의 구조문제와 국민생활

한국경제의 구조 문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①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자본시장 변동성 증대, 환율 변동성 증가, 금융위기의 강도와 빈도 증가
② 신용주도 버블경제로 전환	소매 금융 확대, 가계 부채 증가와 위험성 증대, 부동산 거품 형성, 전세가격 상승
③ 주주자본주의 단기 경영 관행	비용절감형 인력운영, 배당성향 상승,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투자 유인 확대, 사내유보 확대, 인수합병 선호
④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수출 의존형 경제성장 고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 확대, 통제 받지 않는 경제 권력화, 적하효과 소멸
⑤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 비정규직, 근로 빈곤층 발생, 청년 실업 확대



## 한국인은 왜 죽도록 일만 하는가?

강 신 주 (작가, 철학박사)

만일 행복이 눈앞에 있다면 그리고 큰 노력이 없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등한시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

- 스피노자(Spinoza), 『에티카(Ethica)』

### 1.

근면, 자조, 협동.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구호다. 개발독재 시절 농촌 지역을 근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의 슬로건이다. 당시 새마을 운동은 “잘 살아보세”라는 배경음악으로 위풍당당하게 이루어졌다.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해묵은 가난과 배고픔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느낌이 든다. 슬로건 자체가 그저 소처럼 일만하자는 취지 아닌가. 더군다나 정부가 주도했던 운동임에도 모든 책임, 즉 가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는 논리도 문제다.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저 소처럼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진진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 아니 생각하지 말아야 했었던 것. 그것이 박정희의 지배가 독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각은 오직 최고 통치자만 하면 된다. 그 지침에 따라 그저 묵묵히 일하면 된다. 억압적인 사회의 해묵은 공식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사회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란 분업이 존재해야 하며, 당연히 정신노동은 육체노동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상(上)」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등장한다.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을 먹이고, 지배하는 사람은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서 먹을 것을 얻는다.(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맹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심자(勞心者)’와 ‘노력자(勞力者)’라는 구분은 동서양 할 것이 없이 모든 권위주의적인 체제의 핵심적 공리로 반복된다. 이것이 박정희 개발독재가 우리에게 혹은 민주주의에 안겨준 치명적인 상처의 핵심이다. 그는 우리를 마음을 쓰지 않고 육체를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와 같은 가축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여기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을 토대로 공동체의 규칙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란 불가능한 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신만이 생각하겠다는 박정희의 오만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생각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좌절시킨다. 그러나 과연 1945년 해방된 이래, 독재자는 박정희만 있었던 것일까? 아니다. 박정희의 독재 이전에 권력을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하던 이승만의 독재가 있었고, 박정희 이후에도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전두환의 독재가 있었지 않은가? 그러나 시선을 더 확장해보자. 20세기 초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였지 않은가? 식민지의 주민만큼 더 폭압적인 독재에 시달렸던 사람도 있을까. 결국 우리의 20세기는 독재의 세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도 없었던 독재와 폭정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며 살 수가 없었다. 독재자만이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주민들은 그저 독재자의 생각에 따라 소처럼 묵묵히 일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 치하에서는 하나의 반역행위일 수밖에 없으니까.

## 2.

산업자본주의는 근대사회의 핵심이다. 산업자본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과거의 낡은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산업자본은 상업자본과는 그 작동 원리 자체가 다르다. 상업자본은 공간의 차이, 정확히 말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두 지역을 전제로 해서 이윤을 낸다. 바닷가에서는 해산물의 가격이 싸지만, 내륙 깊은 곳에서는 동일한 해산물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린다. 그러니까 상인은 바닷가 근처 어촌에서 해산물을 산다. 그렇지만 어촌의 그 누구도 상인에게 싸게 팔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산물을 들고 상인은 내륙 마을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상인은 해산물을 판다. 그렇지만 마을의 그 누구도 상인이 비싸게 팔았다고 투덜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존재하는 한, 상인, 그러니까 상업자본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상업자본과는 달리 산업자본은 시간의 차이를 통해서 이윤을 남긴다. 그렇지만 상업자본의 경우 공간의 차이,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시간의 차이는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상품을 시중에 내놓으면서 산업자본은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산업자본이 신제품으로 만든 새로운 시간 차이가 바로 유행이다. 유행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은 인간의 허영을 자극한다. 새로운 옷을 입거나 새로운 차를 몰 때, 우리는 자신이 유행에 뒤떨어진 옷이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착시 효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유행을 선도하는 산업자본은 살아남아 번성할 테지만, 그렇지 않고 한때의 영화에 취해 있는 산업자본은 무자비하게 도태할 수밖에 없다. 한 때 휴대폰 시장을 장악했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의 유행 앞에서 도태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새로운 유행을 만드는 기술혁신은 산업자본으로서의 사활을 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 분업화의 논리가 중요한 계기로 대두한다. 그렇지만 분업화의 이면에는 전문화의 과정이 깔려 있다. 기술혁신은 아무래도 전문화가 더 유리할 테니까 말이다. 이런 산업자본의 내적 메커니즘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인력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좌우지간 10개를 연구하는 것보다 1개만을 연구할 때, 기술혁신에는 더 유리할 테니까 말이다. 산업자본이 발달할수록, 종합적이며 전인적인 교육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산업자본은 분업체계의 한 구석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선호하니까 말이다. 산업자본 사이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런 경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 부작용이 아마도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인문학의 퇴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강요받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연구실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에너지 대부분은 우리가 맡고 있는 전문화된 분야에 투여된다.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다. 대학에서부터 우리는 자본이 요구하는 것만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문외한이 된지 오래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술혁신이란 자본의 명령을 생존의 명령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자기 개발과 자기 혁신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사명이 된지 오래다. 면접 때 우리는 자신이 자본이 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해성사했다. 그렇지만 이런 고해성사는 이제 상시적인 일이 되었다. 매번 우리는 자신이 월급을 받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 3.

오래된 독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생각하는 양은지 오래되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 행복했을 텐데 말이다. 설상가상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자본주의는 우리를 한치 앞도 생각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일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 한눈을 팔았다가는 그나마 있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일에 몰입하게 된다. 일할 수 있다는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혹은 일할 수 있을 때 실직의 공포는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말이다. 마침내 우리는 일에 중독되어버린 워커홀릭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과거 원시인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은 사냥하는 시간과 향유하는 시간으로 양분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그들은 사냥하는 시간은 향유하는 시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향유하는 시간은 사냥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시간,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창조하는 시간이다. 물론 그들은 사냥하는 시간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사냥을 하지 않는다면, 향유도 사랑도 창조도 불가능할 테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사냥하는 시간을 통해 아무리 많은 사냥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일정 정도의 사냥감만을 가지고 부족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들은 생각보다 빨리 사냥감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신에게 고마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에게 향유하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원시인들의 삶을 엿보게 해주는 동굴을 들어가 보자. 그들은 자기의 주거지에 온갖 벽화를 새겨 넣었다. 생존을 위한 경제에서부터 벗어났을 때에만 가능한 예술 활동이었던 셈이다. 분명 우리는 양적으로 원시인들보다 잘 살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행하기만 하다. 지금 우리는 향유하는 시간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기 때문이다. 일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하나에 능숙하다는 것은 다른 것에는 서툴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이들과 노는 것, 아내와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 심지어 가족과 함께 공연장에서 연주에 몸을 맡기는 것, 어느 하나 피곤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익숙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항상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일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 다시 일에 몰입하게 된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일밖에 없기에, 일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침내 워커홀릭은 탄생하는 것이다.

“왜 한국인은 죽도록 일만 하는가?” 이제야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일만 했던 오래된 독재의 경험,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일자리 자체를 지상의 가치로 만들었던 산업자본의 압력.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우리를 워커홀릭으로 강제했던 것이다. 일만 하는 가축과도 같은 삶은 그래서 탄생했고, 사랑하고 창조하는 향유하는 시간은 망각되어버린 것이다.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지적처럼 지배와 억압이 관철되는 최종 장소가 주체인 것처럼 자유와 행복이 실현되어야 하는 장소도 주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 시대에 인문학이 필요한 지도 모를 일이다. 인문학은 수동적이 관습적인 주체를 능동적이고 성찰적인 주체로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깊게 생각할 일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라는 덕목이라는 것을. 사랑하고 창조하는 시간, 즉 향유하는 시간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 말이다.



## 월가 점령운동과 미국 경제민주주의의 위기

전 창 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 1. 문제제기

2008년 21세기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미국 및 전세계를 강타한 이후,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은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다해왔다. 미국 정부는 주요 금융기관 및 주요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약 8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자금과 약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준의 달러 유동성자금을 쏟아 부었다. 여기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채무보증액(약 1조 4천억 달러)까지 합치면 4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지출하기로 했다(전창환,2010).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재정금융지원책으로 2010년 초중반 미국경기가 일시회복세를 시현했다. 하지만 유럽의 금융·재정위기가 다시 전세계 경제에 엄습함으로써 미국경제는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회복이 지지부진해, 다수 미국 시민들이 경제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정부의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미국채의 디폴트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채무상환 상향 조정을 위해 양당이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국가채무 위기는 넘긴 듯했다(전창환, 2012). 그러나 재정 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미국에서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반에 걸쳐 몇 가지 주요 재정적자해소조치가 동시에 발동되어 소위 ‘재정 절벽’(fiscal cliff)으로 떠밀려 자칫 낭떠러지로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sup>1)</sup>.

1) 부시정부 시대 2001년부터 실시된 감세정책(소득세율인하를 중심으로 한 대형감세책)이 원래 2010년 종료되기로 되었으나 오바마 정부가 종료시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소위 부시감세가 2012년 말 기한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 오바마 정부의 2010년 고용창출법에 기초하여 실시된, 급여세의 피용자부담세율의 인하 및 실업보험 급여기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의 최대 사회·경제적 문제는 극소수(1%)에 의한 부와 권력의 독점과 나머지 99%의 배제에 따른 불평등의 확대·심화이다. 시기적으로 아주 절묘하게 2011년 9월 17일 뉴욕 주코티(Zuccotti)공원에서 시작된 월가점령운동이 금융자본·금융엘리트·금융관료 중심의 금융자본주의=금융지배체제에 대해 정면 도전함으로써 큰 사회경제적 파장을 일으켰다. 21세기 새로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위기 이외에도 미국 주요 주에서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주정부·지방자치단체들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 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각종 공공복지혜택이 대폭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활이 더 피폐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차별적인 재정지출삭감 등 재정긴축과정에서 주정부와 지방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이 박탈됨으로써 시민·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저 위협받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년 낙담한 서민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극히 미지수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전했을 때 받았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동안 만들었던 두 가지 대표적인 핵심 개혁입법, 의료개혁법과 금융개혁법을 온전히 지켜내고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강화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왜냐하면 공화당을 위시한 미국의 신보수세력들이 이 두 법을 전면 폐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 자체도 월가의 금융자본 등으로부터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이들의 집요한 로비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지극히 회의적이다.

## 2. 21세기 미국의 금융자본주의와 격차(불평등)의 확대

연기금, 뮤추얼펀드,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 이외에 투자은행과 전통적 상업은행 등 21세기 새로운 금융자본들은 금융자본시장에서 포트폴리오가치와 금융 수익성(financial profitability)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들은 금융 수익성(financial profitability)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지구촌 어디든 금융적 유동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들이 금융자유화와 금융규제 철폐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거대투자은행과 투자은행업무 및 자본시장 관련 업무로 영업기반 확대를 추구한 미국의 주요 핵심 금융기관은 거의 모두 지주회사조직을 구축, 이용가능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백화점식으로 제공한다. 거대 투자은행은 전통적인 증권 중계수수료 수입보다는 M&A 자문 서비스, 자기계정에 기초한 공

---

간의 장기화 등의 우대책이 2012년 말로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2011년 국가채무를 상향조정된 법안을 가결했을 때, 설정되었던 조항( 즉 초당적 재정삭감 조치가 책정되지 않을 경우 2013년 1월부터 자동적으로 세출을 삭감·국방비를 중심으로 10년간 1.2조 삭감)하기로 하는 조항이 발동된다.

격적인 포트폴리오투자(자기계정거래; Proprietary Trading)와 자기자본투자(PI: Principal Investment)를 추구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은 무분별한 투자와 위험노출증대로 심각한 위기와 손실에 직면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기존 사업모델에서 한 치도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공적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Goldman Sachs사와 Morgan Stanley사는 이전의 투자은행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금융지주회사의 틀 하에 머물고 있다(전창환, 2009).

상대적으로 금산분리를 엄격히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비금융제조업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금융자본, 특히 기관투자가, 그 중에서도 Fidelity, Vanguard, BlackRock<sup>2)</sup> 등 뮤추얼펀드 등이 미국의 주요 기업 소유권을 확대해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분산된 주식보유구조 하에서 비금융제조업의 CEO는 겉으로는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을 내세우면서 주주(소유자)의 이해를 최대한 떠받친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신의 경영자권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금융(non financial) 제조업도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재화·서비스의 생산 이외 재무적 활동= 포트폴리오 투자 및 유동자산 운용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조 생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들 CEO가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제품의 질이나 생산 공정의 개선보다는 설계(design)와 브랜드가치의 관리(brand-value management)이다. 이미 제조공정은 중국 및 동아시아, 인도 등으로 이전되어 실제 미국 내 제조업의 고용은 극히 미미하다. 21세기 미국 기업 중에서 종업원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법인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유통 관련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은 미국경제가 얼마나 탈산업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경제의 이런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 산업, 금융서비스산업(financial services industry)으로의 집중현상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 즉, 금융서비스산업으로 소득이 집중됨으로써 GDP와 법인이윤에서 금융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FSOC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불황기를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금융이 모든 법인이윤의 25-50%를 차지했다(FSOC, 2012: 110). 또한 1980년 이후 25년 동안 금융섹터의 이윤이 800% 증가한데 비해, 그 외의 섹터에서의 동증가율은 250%에 그쳤다(Simon & Kwak, 2010:60). 이외에도 금융부문(sector) 평균보수가 비금융부문에 비해 70-80%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은행과 증권 거래업에서는 평균 보수가 돌출적으로 더 높아 비금융부문에 비해 300-450% 높은 수준에 이른다. 더 놀라운 것은 1989년 미국의 주요 7대 은행지주회사 CEO의 급여(경영자보수)가 280만 달러로, 중간가계소득(28,909달러)의 97배였지만, 2007년에는 중산층의 연평균보수(50,233 달러)의 516배인 2600만 달러에 달한다는 현실이다.

2) BlackRock은 iShare ETF 사업 소유자로 2011년 현재, 1800개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주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4300개 기업 중 40%를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BlackRock은 3조 5천억 달러의 자산관리로, 미국 기업 5개 중 하나에서 단일 최대주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미국의 주요 뮤추얼펀드인 Fidelity사는 미국 기업 열 개 중 하나에서 최대 주주로 10-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Davis, 2012: 12) Davis는 20세기 초 J.P Morgan(money trust) 주도의 은행-기업결합 구조를 1.0. 금융자본주의=(단명으로 끝난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르고 21세기 BlackRock, Fidelity 등 뮤추얼펀드 중심으로 한 기업소유권=기업지배구조를 2.0 금융자본주의로 부른다.

2007-9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정부가 금융 시장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재편과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6대 은행지주회사<sup>3)</sup>의 금융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되었다. 2010년 3/4분기 6대지주회사 총자산이 GDP의 64%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2006년 55%, 1995년 1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비교준거로서 1978년 모든 상업은행 결합자산이 GDP의 53%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미국 은행의 집중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금융당국 일각에서 미국 금융기관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거대금융기관의 분할을 고려할 정도에 이르렀다.

〈표 1〉 미국 은행에서 자산비중의 추이 (단위:%)

	상위 5대 은행	상위 6-100 은행	100대 이하 은행
1970	17	32	46
2010	52	37	16

\* 자료: Harvey Rosenblum(2012), "Choosing the Road to Prosperity: Why We Should End Too-Big-To-Fail Now",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Annual Report 2011.

금융화와 금융자본주의가 초래한 최대의 사회경제적 문제는 격차 및 불평등의 확대이다. 이 격차 및 불평등의 확대·심화는 거의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00년을 회고해 볼 때, 1948-1973의 기간에 불평등과 격차가 가장 적었다. 흔히 이 시기는 미국경제의 황금기 시기로 고생산성 → 고임금 → 지속적인 소비증가 → 투자증대 → 생산성향상이라는 포드주의적 선순환이 작동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격차 및 불평등의 확대에는 실로 다양한 경제 사회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각종 공공정책이 격차의 확대와 심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1970년 2007년 사이 자본이득세가 32%에서 15% 인하되는 것을 위시하여 전반적으로 부자감세,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감세조치가 크게 작용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레이건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노조 파괴 및 노조무력화정책이 강력히 추진됨에 따라 노조조직률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이다(Dube & Kaplan, 2012). 최근 7%대로 떨어진 미국노조조직률은 미국노동운동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노조의 전반적 조직률 하락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2011년 평균 34,000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2.8%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등 놀랄 것이 못된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민간기업의 노동자 임금은 거의 동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미국 500대 기업 CEO 평균보수는 2011년 12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10년부터 보면 23% 증가했다. 또한 1980년 대기업 CEO의 보수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42배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380배 이른다. 나아가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이 가장 높은 최상위 1%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3) Citigroup, J.P. Morgan Chase, Bank of America, Wells Fargo,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율이 1979년 9.7%에서 2005년에는 21%로 급격히 증가했다(岡前則男, 2012: 157).

마지막으로 주와 도시 내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심했다. 뉴욕 주의 경우, 가장 부유한 1%의 소득 취득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뉴욕 주 전체 총소득의 35%에 달했다. 뉴욕 시의 경우, 최상위 1%의 부자들이 뉴욕시 총 소득의 44%를 거둬가는 실정이다(Shepard, 2012b: 29).

### 3. 월가 점령운동과 지지부진한 월가 금융개혁

월가점령운동이 2012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첨단 IT 기자재로 재무장해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태세였지만 1년 이 지난 지금시점 운동의 동력이 상당히 약해진 것처럼 보인다. 전 세계의 이목이 여전히 월가점령운동세력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 운동이 이미 앞에서 강조했던 21세기 미국 자본주의의 정곡을 조준하여 이에 정면 도전할 뜻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내건 슬로건은 극소수의 1%가 국민대다수 99%를 정치경제적으로 압도·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금권정치)의 아성을 허무는 것이다.

이 운동의 초기 주체는 상대적으로 젊은 백인 중산층 시민이었고 노동자 및 노조의 후원과 지원은 그 이후의 일이다. AFL-CIO 산하의 노조 대다수는 OWS운동 발생 초기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단 뉴욕 교통노조만이 여기에 참여하여 지지를 표명했다. 그 이후 National Centre, AFL-CIO가 지지에 동참했다. 노조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간호사협회, 전미간호사조합(NNU)가 OWS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 이후 지역사회단체와 학생들이 적극 동참하고 지지했다. 이 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월가점령운동이 시민과 노동의 연대와 협조 하에 이루어진 운동이라고 하겠다. 다만 21세기 노조 조직률이 워낙 낮은데다가 미국노동운동이 온건하고 협조적인 성격이 강해 시민운동에 노조운동이 가세한다고 하더라도 폭발력을 갖기에는 애시 당초부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민세력과 노동운동세력과의 연대와 공조는 지난 1970년 5월 노조와 반전시민운동세력 간에 큰 충돌이 있었던 Hard Hat Riot 운동과는 크게 대비된다고 하겠다<sup>4)</sup>(Shepard, 2012a).

---

4) 60-80년대 노조는 보수적이어서 다른 사회활동가로부터의 지지를 상실했다.

〈표2〉 OWS 운동 vs Tea Party운동

OWS 운동	운동	Tea Party 운동
백인 대졸 젊은 층(백인 중산층)	담당자	백인 중년 · 노년층
1%vs 99%의 경제력격차 해소, 인권보호, 민주주의, 반전평화, 월가 금융규제	메시지	작은 정부, 증세반대투쟁, 역사중시
민주당, 노조 등이 접근 중.	정치와의 관계	공화당내의 우파세력으로 이미 많은 의원을 확보.
populism, anti-establishment지향, liberalism	운동의 성질	populism, anti-establishment, libertarian
전 세계로 전파	영향력	미국만의 현상에 그침
고용	핵심 의제	재정

이 운동이 전하는 메시지가 워낙 명료한데다 작금의 뒤틀린 경제현실에 대한 비판이 큰 공감과 반향을 일으키자, 월가점령운동은 미국 내 주요 도시<sup>5)</sup>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로마, 동경 등 전 세계의 다른 국가와 도시로 파급되었다.<sup>6)</sup> 최근 이 운동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폭발적인 영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내걸었던 핵심 메시지만큼은 쉽게 잊기 어려울 것이다.

월가점령운동의 중요성은 금융위기와과정에서 소수인종 유색인종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노동세력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집권한 오바마 정부 하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중적 저항운동이라는 점에 있다. 하지만 월가점령운동은 1930년대 초반 대공황 이후 극심한 불황과 대실업 사태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뉴딜을 실시하도록 압박하는데 큰 기여를 한 1934년 총파업(general strikes)의 전투성에 비하면 크게 미약한 편이라 하겠다(Kramer, 2012: 39-42).

이미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2007-9년 서브프라임대출위기에 시작하여 리먼브라더스 사의 파산으로 미국 및 전세계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와 혹독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미국 및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수 조 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자금을 쏟아 부었다. 경기회복을 위해 거의 3년째 제로금리정책을 무리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경제회생 소식을 듣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미 연준의 제1차 양적완화정책(QE1), 제2차 양적완화정책(QE2), 미연준의 장기국채 매입 및 보유단기국채의 장기국채로의 전환(Operation Twist) 등 무차별적인 신

5) 2011년 9월 17일 뉴욕에서 월가점령운동이 시작되어 10월 15일에는 미국과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나아가 2011년 11월 2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시에서 시 차원의 총파업(genest)이 발생했다. 2011년 10월 26일 총회결의(오클랜드를 해방하고 1%를 봉쇄하라) 참가자 1607명 중 1484명이 찬성했다. 미국에서 이런 시 차원의 총파업은 65년 만에 재개된 것이며 규모로는 60년대 말 반전운동 이후 최대로 평가된다.

6)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수도 베를린 등에서 2011년 11월 2일 “은행을 봉쇄하라”라는 구호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외에도 시드니, 홍콩, 타이페이, 동경, 쌍파올로, 파리, 마드리드, 베를린, 함부르크, 라이프찌히 등 전세계 900 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다(Yangfang, 2012: 248).

용확대 정책이 연이어 실시되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마침내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미 연준은 2012년 9월 중순, 제3차 양적완화정책(QE3)을 실시했다. 이런 극약처방으로 건전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애시 당초 불가능하다. 제로금리 정책기간을 2015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함으로써(시간축 연장) 비정상적인 경제상태가 더 오래 연명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른 한편 오바마 정부는 당연히 위기의 주범인 월가의 거대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위기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어야 했는데 막대한 세금만 투입했을 뿐,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바로 이 대목은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J.P.Morgan을 위시한 당시 월가의 금융자본에 대해 지금까지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검찰 소환과 조사, 책임 추구를 다했다는 점과 너무나도 확연히 대비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공시 강화 및 회계부정 및 시세조작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서부터 시작해 거대금융기관 J.P.Morgan의 분할·해체,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 증권시장에서의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을 추진했다. 이런 금융 뉴딜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적 운동과 30년대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Ferdinand Pecora 검사가 당시 월가 금융기관의 소환·조사·단속·처벌 등으로 종횡무진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과 분위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1세기 금융화와 금융세계화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미국의 국가경쟁력 나아가 미국의 국가이익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현 시점에서는 1930년대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미국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규제당국 등이 월가의 금융세력들에게 완전히 포획되어 있다.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 월가의 거대금융기관을 살려 놓은 지 1-2년이 채 안되었는데도 이들이 천문학적 숫자의 임원 및 경영자보수와 퇴직금 챙기기=돈잔치에 혈안이 되었다고 하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대마불사의 폐해라고나 할까,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할까?

마침내 미국 의회는 월가의 거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대마불사의 폐해를 철저하게 불식시키고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 법안은 2009-2010년에 걸쳐 상하 양원에서 발의·심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본 금융규제개혁법의 최종 정식 명칭은 닷-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다(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 법은 총 16장(Title) 1601조(Section)로 구성된 실로 방대한 내용이다. 법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압축 발표한 최종분량만 848 쪽에 이르렀다.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SOA)이 66쪽,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37쪽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법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듯하다. 아무튼 이 법은 1929-33년 대공황을 직접적 계기로 루즈벨트 대통령 하에서 이루어진 뉴딜 금융개혁법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금융개혁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전창환, 2011).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전례 없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닷-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이 월가의 거대금융기관을 규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법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과 룰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법안 제정 당시에는 이런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규칙들이 부재했거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 당시 이미 월가의 금융자본=금융엘리트들이 막대한 로비자금을 살포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적인 규칙을 삽입하도록 로비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예측이 기정사실이 되어 닷프랭크 법이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인 경우 폐지될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1년 가을이후 월가점령운동세력이 이구동성으로 월가 거대금융기관의 탐욕과 횡포, 그리고 그에 따른 갖가지 피해를 성토했고 있는 와중에(Yangfang, 2012: 252), 월가의 금융자본=금융엘리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특히 미국의 정치일번지인 워싱턴 DC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들이 월가점령운동세력의 주장과 비판에 일말의 관심을 갖거나 자기반성이라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답은 완전히 부정적이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들은 월가점령운동세력을 더 도발하고 자극하는 일들을 획책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가의 금융자본=금융엘리트들은 월가의 금융규제개혁법을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철폐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赤木昭夫, 2011).

2010년 닷프랭크법이 통과된 이후, 월가의 거대금융기관(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모펀드, 헷지펀드 모두)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거대금융기관 소속 로비스트들이 관련 변호사들을 확보하면 이들 변호사들이 상하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직원들을 모아 각종 법안 해설 내지 안내문을 만들어 돌린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의원들로 하여금 개정 법안을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그중 일부를 의원들이 채택해 소위원회에서 발의하면 다수결 절차를 거쳐 법안 내지 개정 법안으로 성립된다.

이들 거대금융기관이 로비자금으로 뿌리는 금액의 규모는 실로 가공할만한 수준이다. 미국의 정치자금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연구소인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2011년 미국 거대상업은행과 투자은행들이 로비활동으로 쓴 비용이 1억 5760억 달러, 1억 59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이 막대한 자금으로 거대금융기관들은 금융 전문가들이나 금융법률 관련 정예 전문가를 의회에 투입하여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왔다. 최근 이 로비활동의 결과로 벌써 월가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면제 내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20여개를 넘는 수정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월가점령운동세력이 목도한 것이 바로 이런 현실이었다. 금융위기의 발생과 관련하여 월가 금융자본들은 자체적인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거액의 로비자금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금융규제개혁을 좌절·무력화시키고자 했다.

주코티 공원에서 출발한 월가점령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철저한 금융개혁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가 폭발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정치권내에서는 이런 시민사회운동의 분위기와는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월가 금융자본=금융엘리트들에 대한

철저한 금융규제감독에 불리한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월가금융규제개혁법을 주도한 두 핵심인사인 크리스토퍼 닷(Christopher Dodd) 상원의원(상원은행위원회위원장)과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하원의원(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특히 금융법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바니 프랭크의 은퇴를 이취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 가을 의회선거에서 상하양원 모두 닷-프랭크 법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롬니를 포함하여 공화당 대통령후보들로 나온 인물 모두 닷-프랭크법에 대해 부정적이다.

오바마와 민주당 정부가 상당 정도로 희석화되고 형해화된 금융개혁법을 얼마나 온전하게 지켜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지난 4년의 행적으로 보아 월가금융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4. 재정긴축 강요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기본권 박탈위협

월가점령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동안, 미국의 주요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위스콘신 주 등 전미 20개 주들이 재정긴축을 통한 각종 공공부문 서비스를 축소 폐지하는 한편,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가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 및 노조는 격렬한 반대와 단호한 태도로 일관할 것을 천명했다. 일례로 오하이오 주에는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주법을 입법화하자 이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법이 주민투표의 결과 부정·폐기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내 보수파의 썩크탱크나 공화당, Tea Party 등은 국가 및 주정부의 재정적자 증대의 책임을 공무원의 관대한 처우와 과도한 권한에 있다고 보고 국가의 주요정책 차원에서 단체교섭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려는 운동을 벌여 왔기 때문이다.

위스콘신 주의 사례부터 보면, 2010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주 지사된 스콧 워커가 주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재원확보와 지출삭감을 지상명령으로 삼아, 지금까지 주정부와 공무원 노조와의 협약을 파기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료와 연금기금기여금의 노동자부담비율을 50% 인상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비율을 요구하는 제안을 해왔다. 나아가 그는 주정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여러 주 중에서 위스콘신 주는 민주주의의 실험실로 알려져 있고 단결권 등 노동자의 권익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위스콘신 주에서는 공무원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아주 잘 확립되어 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는 주에서 주지사가 공무원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섰으니, 3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 공화당 다수의 주의회하원에서는 재정삭감안을 승인했으나 상

원에서는 민주당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워커지사는 2011년 3월 1일 함께 15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이 예산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주 의회에서는 공화당 쪽에서 이 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주지사 소환으로 대응했다. 선거가 2012년 6월에 실시되었지만, 스콧 주지사가 당선됨으로써 주정부 공무원의 저항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오하이오 주에서는 주지사가 아무런 대화도 없이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합비 징수, 스트라이크 등을 모두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본안이 2011년 3월 의회에서 가결되었지만, 노조, 지역운동,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2011년 11월 동법률을 폐지하고자 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투표결과 오하이오 주에는 위스콘신 주와 달리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려는 동법을 폐지하는 데 찬성하는 표가 63%를 차지해 주정부 노동자 측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 5. 요약 및 결론

미국 내에서 확대·심화되어 왔던 소득불평등과 격차가 일반 서민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자, 미국시민들이 뉴욕의 주코티공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구호 하에 시위에 나섰다. 2012년 9월 17일이면, 월가점령운동이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된다. 2012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이 운동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재개되는 듯 했으나 최근 미국의 대통령 선거국면 하에서 크게 쇠퇴하는 양상이다.

시민 주도의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이었던 월가점령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와 제언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월가점령운동은 조직화 양식이나 의사소통방식, 의사결정방식(다원주의적 직접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대중운동과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Brucato, 2012). 과연 월가점령운동(OWS)이 노동운동을 비롯한 다른 사회운동과 협력하여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더 확산될 수는 없었을까? 역시 관건은 미국의 노조 및 노조운동이 얼마나 이 시민불복종운동에 힘을 보탤 수 있을가에 달려 있었지만 미국 노조운동의 한계가 예상대로 꽤 커 보인다. 월가 점령운동추진세력 내에 아나키스트 성향을 가진 세력이 적지 않아 관료화되고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노동운동과의 연대 및 결합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sup>7)</sup> 노조운동세력 내에서는 트로츠키주의자들도 가세해 이 운동을 더 급진화 하려는데 비해, 민주당에 친화적인 노동운동세력은 이 운동을 오바마대통령 재선지원단으로 활용할 뜻이라고 하니 이들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꽤 큰 편이

7) 최근 미국의 노조에서는 연소득 기준으로 10만불-15만불 이상 버는 노조간부가 과거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노조 간부는 자발적이고 전투적인 월가점령운동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Trudell, 2012).

다. 월가점령운동세력중의 일부는 이 운동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운동과 결합시키려는 노조운동세력을 아주 불신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Trudell, 2012)

21세기 영미가 주도하는 금융화 시대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금융경제학, 재무 회계학, 금융법 등의 기업화된 학문이 세운 지적 상부구조의 결정적인 측면으로 금융·자본시장의 자연화<sup>8)</sup>(Naturalization of Financial Market) 속에서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금융과 관련하여 생경하고 이질적인 용어와 개념이 대거 생성되고 있지만 이들 용어와 개념이 전하는 핵심메시지는 효율시장가설이다. 나아가 이들은 이차대전 전 금융가들의 좋지 않은 평판(각종 부정부패와 시세조정(작)에 연루되면서도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불투명하고 베일에 가려진 거대권력)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Flandreau, 2012). 그리하여 2차 대전이 끝난 1950년대 즈음에 이르면 금융가·은행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상당정도 완화되고 희석화되었다.

금융시장의 자연화가 초래한 최대의 효과는 금융시장은 정치적·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관념이다. 실제 이 관념이 꽤 오랫동안 시장행위자들과 정책결정자의 마음을 지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7-9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런 관념이 종언을 고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요컨대 금융·자본시장을 민주적 통제로부터 차단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금융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상, 금융이 없는, 혹은 금융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제한 일상생활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이나 노동세력이 금융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금융개입운동(financial engagement) 내지 금융참여운동(financial participation)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딜레마는 현대의 금융문제가 너무 복잡한데다가 그 해법을 찾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민운동과 노동세력은 이런 어려움과 난관을 핑계로 하여 금융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과거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관련 의제가 이제는 더 이상 소수의 금융전문가, 금융관료, 금융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시민세력과 노동운동세력의 최대 과제는 까다로운 수많은 금융의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언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자본시장을 민주적 통제의 틀 안에 다시 끌어 들일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전창환(2008),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 경쟁, 동향과 전망, 73호, 6월 1일.

전창환(2009),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원인과 교훈, 동향과 전망, 75호.

전창환(2009), 미국의 금융위기와 금융자본의 재편, 동향과 전망 76호.

전창환(2010), 미국의 금융위기와 오바마정부의 새로운 뉴딜?, 동향과 전망, 78.

8) Froud *et al*(2012: 6-7).

- 전창환(2011), 1997년 한국의 외환·금융위기이후 구조조정과 증권화, 동향과 전망, 81호.
- 전창환(2011),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닷-프랭크법 검토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 연구, 통권 20호.
- 전창환(2012), 2011년 미국의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의 딜레마, 동향과 전망, 84호, 2월.
- 赤木昭夫(2011), 金融改革停滞への怒り-ウォール街占據, 世界, 12월호.
- 岡前則男(2012), オキュパイ運動と 労働組合運動, 經濟, 9월호 .
- Brucato, B.(2012), "The Crisis and a Way Forward: What We Can Learn From Occupy Wall Street", *Humanity & Society*, Vol.36, No.1
- Davis, G.(2012), "Re-imagining the Corporation", Prepared for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s: Real Utopias' Draft, April, 24.
- Dube A & Kaplan E(2012), "Occupy Wall Street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Inequality", *The Economists' Voice*, March.
- Flandreau, M(2012), "The Vanishing Banker", *Financial History Review*, Vol.19, No.1.
- Froud, J *et al.*(2012), "Stories and Interest in Finance: Agendas of Governance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Governance*, Vol.25, No.1, January.
- FSOC(2012), *2011 Annual Report*,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Johnson S, & Kwak, J(2010), *The 13 Bankers: The Wall Street Takeover and the Next Financial Meltdown*, Pantheon Books.
- Kramer, J(2012), Occupy Wall Street and the Strikes of 1933-34, *Socialism and Democracy*, Vol.26, No.2 July.
- Lewis, P & Luce, S(2012), Labor and Occupy Wall Street, *New Labor Forum*, Spring.
- Shepard, B(2012a), "Labor and Occupy Wall Street: Common Causes and Uneasy Alliance", *Working USA*, Winter.
- Shepard, B(2012b), "Occupy Against Inequality", *Socialism and Democracy*, Vol.26, No.2.
- Stucke, M(2012), "Occupy Wall Street and Antitrust",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179*, March, 2012, College of Law, University of Tennessee at Knoxville.
- Trudell, M(2012), "The Occupy Movement and Class Politics in the US", *International Socialism*, 1월.
- Yangfang, T(2012), "A Review of the 'Occupy Wall Street's Movement and its Global Influence", *International Critical Thought*, Vol.2, No.2 June.

##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과제\*

송 원 근 (경남 과기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1. 들어가며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아니다”

한국 경제에 관한 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경제학자의 발언이다. 이 발언이 하필이면 삼성 재벌 계열사 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나왔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재벌 개혁보다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에 있다는 주장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짚고 넘어갈 일은 그가 말하는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재벌개혁 조치들의 대부분은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는 점, 따라서 이와 유사한 주장이나 언급은 정부 재벌개혁의 한계를 넘고자했던 주장과 노력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이다. 또 하나는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그것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영역에서 민주화가 내포하는 의미들이 무엇이고 이 의미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명확한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본질을 한 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대신 정국을 앞두고 너도 나도, 심지어는 여당에서조차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경제민주화 혹은 재벌 개혁의 문제가 “모두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다”, “대선이 끝나면 경제민주화 논의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주장들, 그렇지만 오랫동안 얘기되면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진

\* 이 글은 2012.10.26 경제발전학회 발표문으로 작성된 것임.

지하에 고민할 때이다.

이 글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다양한 경제민주화 논의들이 주로 현상에 대한 처방과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극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민권의 확보라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연관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극에 달한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 역할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고민의 소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반성과 문제의식, 고민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원리와 내용들을 경제 영역에 적용 시킴에 따라 생기는 경제민주화 여러 층위들을 구분해보려고 한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출발은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재벌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재벌개혁 혹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재벌개혁 논의들을 검토해 보았다.

## 2. 경제민주화의 층위들

경제민주화 혹은 경제민주주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시장주의자들에게는 소유권의 확립과 이에 기초한 자유일 수도 있고, 소득의 공정한 분배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민주주의는 절차적 측면에서 정치 민주주의의 경제적 적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는 근대 시민사회의 일반적 원리로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 실천의 결과가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확대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사이에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장집, 2007).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민주주의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경제 영역, 혹은 사회경제 영역에 민주주의에 적용하고, 그 실천 방법을 풀어내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경제민주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절차적 개념뿐만 아니라 실천의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역시 더욱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sup>1)</sup>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하게 여러 층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혹은 정책적 차원에서 우선 순위의 문제도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

1)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민주화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삶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 1) ‘1주1표주의’에서‘1인1표주의’로

형식적 혹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표상들을 ‘1인 1표주의’, 대의제, 참여 등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원리나 내용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경제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의 첫 번째 층위를 가시화할 수 있다. 예컨대 ‘1인 1표주의’ 참여에 의한 대의제가 경제영역에서 가장 잘 실현된다고 간주되는 것은 바로 현대 주식회사 제도이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주의’에 입각하여 회사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에게 회사 경영을 맡긴다. 그러나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1주 1표주의’에 기초한 기업 운영은 경영자 대표들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수반하며, 따라서 주식 수에 따른 투표권의 행사 자체로는 민주주의가 완전하게 실현된다고 말할 수 없다.

주주자본주의, 혹은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지배모델은 소유-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 기업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주주에게 부여함으로써 경영 책임을 묻는 기업시스템이다. 그러나 소유-경영 분리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일상적 활동이나 기업내부 정보에 있어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초래하여 경영감시에 공백을 만든다. 또 자본시장 유동화로 기업경영에서 갭기는 위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주들이 기업을 통제하고 감시할 유인은 더욱 줄어든다. 감시 유인이 줄어들면 주주들은 경영자들 고용 조정과 같은 ‘주주가치 극대화’ 행동을 묵인함으로써 기업 내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위협했다(송원근, 2008). 따라서 1주1표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경제(기업)영역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규율되지 않는 형식적인 통제권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기업 경영의 민주화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근대적 소유권에 기초한 회사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주식회사제도 자체에, 그리고 주주 이외에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1인1표주의’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 1인1표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공공정책에 관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는 것처럼 기업경영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같은 기업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이 기업경영에 대하여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코즈(R. Coase)같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생산을 조직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태생적으로 민주주의보다는 위계나 명령에 의해 유지되는 조직이다.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독점이 심화될수록 기업 내 권력의 집중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흔히 경제민주화의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개혁’이나, ‘민주적 기업’, ‘산업민주주의’, ‘작업장 민주주의’등과 관련된 여러 제안들은 전제적인 자본-노동관계, 기업 내 집중화된 권력을 완화하거나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그 출발점에는 노동권의 보장과 노동조합을 통한 참여이며, 산업적 경제민주화 완결은 기업 경영과 이윤 배분에 대한 참여를 넘어 책임을 공유하는 노동의 시민권의 확보이다.

재벌 중심의 기업 체제에서 경제민주화가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식회사가 가진 본원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60표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그리고

현재와 같은 지주회사체제를 이용한 계열사 지배 때문이다. 나아가 1주1표주의를 위반하여 다수의 계열사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총수(일가)는 경영 실패나 주주들에 피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성과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이 재벌개혁 방안의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졌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삼성재벌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전근대적 기업경영, 단기수익만을 노리고 기업경영에는 무관심한 주주들 이외에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기업 경영은 경제민주화가 1주1표주의에서 1인1표주의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 2) '민주적 시장경제' 대 '시민경제'

경제민주화의 두 번째 층위는 민주주의를 자유시장경제와 연관시키는데서 비롯된다. 자유시장경제는 ①자유로운 선택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개인들이 ②시장에 참여하여 공정한 게임 절차나 루울에 입각하여 경쟁하고, 나아가 이런 ③게임의 결과가 효율적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시장 규칙을 훼손하는 정부 간섭이나 사전적인 개입은 불필요하다. 만약에 이러한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동어 반복이거나 혹은 더 극단적으로는 경제 자유화, 혹은 1원1표주의의 주주민주주의로 그 의미가 좁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김병권, 2012b).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고, 또 양립해서도 안 된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정부의 개입과 이로 인한 시장질서의 혼란은 경제민주화를 '시장 대 국가(정부)'의 대당 속에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민주적 시장경제의 목표는 정부 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개입과 경쟁 제한적 규제를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1998년 외환금융 위기 이후 "민주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진행되어왔던 재벌 개혁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시장 대 정부'라는 대당 관계 속에서 개념화되고 실현되어온 경제민주화 조치들은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공정한 시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주도 성장기에 형성된 재벌체제를 규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후 규제완화나 민영화로 구체화된 시장이테올로기는 전통적인 공공영역에까지 침투하여 패권적인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정 경쟁이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시장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쟁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자유주의적 과제'(김상조(2012)를 해결하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라는 또 다른 층위의 경제민주화 과제는 여전히 정부의 몫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정부는 시장에 내어준 공공영역을 되찾고,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행해야 한다.<sup>2)</sup>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국가 대 시장의 대당으로서 기존의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개입을 넘어서는 ‘시민경제’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경제’는<sup>3)</sup>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 소유권의 광범위한 분산을 기초로 한 ‘제한된 시민경제’이다. 시민경제에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사전적인 경제적 평등 혹은 경제적 독립을 토대로 하여<sup>4)</sup> 정치적 평등, 자기통치로서 자유, 심의정치, 시민적 덕성이 가능한 경제이다. 이를 통해서 소유적 시장사회화의 확대재산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 혹은 국가의 역할은 시장 확대를 전제로 하는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역할, 혹은 보편적 복지 제공자로서 정부의 역할과는 차별화된다.<sup>5)</sup> 시민으로서 의무와 경제적 독립을 확대하는 일자리 창출, 시장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으로 권리가 축소되고 협상력이 약화되어왔던 노동자, 상인, 중소기업, 소비자들의 권리와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그러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 3) 경제력 집중 억제와 민주주의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 독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독점이 만들어내는 불공정한 시장, 경쟁규율법과 제도, 정부 규제의 공백 상태에서 생기는 경제력 독점의 심화와 집중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협한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형성되고 강화된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을 침해하는 것처럼. 그동안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목표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경제민주화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굳이 재벌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거대화과 독과점화로 발생하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1930년대 독점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진보시대’의 논쟁은 경제력 집중 억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119조 2항)

3) 여기서 시민경제는 대거(Dagger, R)의 표현에서 빌린 것으로 국내에도 이미 소개된 적이 있다. 공화주의에 관한 논의는 참여정부 시절에 논의가 활발하게 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공화주의의 핵심 담론인 ‘자치가 ‘참여’라는 말과 중첩되면서, 시민권을 확보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근 마이클 샌델(M. Sandel)에 대한 대중적인 열풍 속에서 다시 커진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은 파탄에 이른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질서가 자유주의에서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국가 개입이나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거와 같은 국가 역할을 복구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시민경제’로 전환을 샌델의 표현으로 하자면 경제성장과 재분배의 정치경제에서 ‘시민권의 정치경제’로 재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시민들 간의 불평등한 지배관계를 없애고 사회경제적 독립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Casassas(2008)을 참조하기 바람. 이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그것이 어떤 의무도 부과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 때문에 노동에서 이탈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은 시민으로서 덕성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일자리 창출, 고용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5) 시민경제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이병천(2012)를 참조하기 바람.

제라는 경제민주화 목표를 실현하는데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sup>6)</sup> 당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독점대기업에 집중된 권력을 탈집중화하여 민주적 통제 아래 뒀으로써 자치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의 독점과 트러스트를 토대로 한 거대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화되고 이것이 민주정부를 침식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이른바 공화주의 전통). 다른 하나는 경제력 집중과 같은 현상을 돌이킬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국가적, 민주적 제도들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다(신국가주의 전통).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점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시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두 입장이 일치된 견해를 보였고, 이것이 독점금지법 제정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sup>7)</sup>

탈집중화를 통해서 지키고자 했던 이 시민권이 이후 소비자들의 연대를 통한 민주주의, 그리고 전후 성장과 분배 정의의 정치경제론에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의 커다란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가 되어야 한다.

### 3. 경제민주화로서 재벌개혁

#### 1) 재벌 개혁의 방향

경제민주화가 이러한 충위를 가진 것이라면 재벌개혁은 정치권력화된 재벌의 탈집중화를 통하여 그 폐해를 막고 기업 수준에서 그리고 시장경제 수준에서 각 참여자의 시민권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총수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는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참여나 감시를 불가능하게 하며, 특히 노동자들의 헌신을 유인하지 못하는 기업시스템을 고착시켰다. 따라서 이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노동개혁도 가능하지 않고, 시민권과 자치를 실현하는 시민 경제의 형성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필연적으로 정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sup>8)</sup> 나아가 재벌 개혁은 과거 정부-재벌간 연합에 의한 경제성장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모델, 혹은 발전모델의 모색이라는 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sup>9)</sup>

6) 당시의 논쟁에 대해서는 샌델(2012)와 박경로(2012)를 참조하기 바람.

7) 샌델은 이러한 두 가지 전통에 더하여 치열한 연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원이라는 당시의 소비주의적 비전을 추가했다. 이는 영향력을 가진 계몽된 소비자로서 대기업과 집중화된 시장의 비인격적 세계와 대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미국 정치의 방향을 '시민권의 유지와 육성'에서 '성장과 분배 정의의 정치경제학'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샌델, 2012).

8) 경제적 약자들에게 힘과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협상력을 높이고, 스스로 재벌 견제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김병권, 2012b).

9) 이러한 고민은 이병천(2012), 정태인·새사연(2012)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에도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기업집단법의 제정: 재벌의 실체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굳이 대선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최근 재벌개혁에 관한 논의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행되었던 친기업적 규제완화 조치들이 만들어낸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서 기인한 바 크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재벌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지는 것에서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계열(기업)분리명령제, 그리고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기업집단법의 제정 논의이다.

〈표 1〉 이명박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

상호출자제한 기업 규모 완화	2008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2009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2009년 7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을 기존 4%에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확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과 비은행 금융기업이 혼재된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

기업집단법 관련 논의는 2008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전후하여 제기된 적이 있으나, 동 정책이 폐지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기업집단법은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집단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실체라는 점을 상법적 각도에서 인정하고 그 존재와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별개의 법률로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법으로서 일종의 특별법이다(정태인·새사연, 2012). 이 법은 공정거래법 내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집단, 즉 재벌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 규정,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기업들, 즉 계열사 관계의 성립과 해지 요건, 계열사 편입의 법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또 기업집단 전체의 지휘통제 구조, 예컨대 구조조정본부 등과 같은 조직의 존재와 법적인 지위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sup>10)</sup>

이와 같은 기업집단법은 독일의 콘체른법을 준거로 한 것으로 재벌 계열사 지배와 그룹집단의 경영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기업 집단의 그룹 경영 특히 내부 거래로 인해 발생한 계열사의 피해와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고 지배적 회사의 법률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지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재벌의 지배구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금융거래 정상화 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1)</sup>

10) 출총제 폐지 당시의 기업집단법 논의에 대해서는 김선웅(2006), 전성인(2006), 이상승(2008)을 참조

11) 기업집단과 관련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을 새로 제정해, 기업집단이 그 강점을 실현하게 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만들자(김선웅, 2006). 중소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관계, 그리고 은행과의 대차 관계 등 이른바 ‘준내부적 조직’(Quasi-internal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

잘 알다시피 기업집단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법 체계는 개별 회사를 상대로 하고 있고, 따라서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으로 운영되는 기업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면 소유-지배 괴리도가 큰 기업이 상장기업일 경우 상장계열사에서 비상장계열사로 내부거래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상장계열사의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부터(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에 기업 내·외부의 통제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이 경우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체제로 기업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큰 비상장계열사로부터 지배주주에게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때는 개별 상장기업 단위의 지배구조장치는 무력하게 된다. 간접 지분을 통해 통제권을 확보한 비상장계열사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해당 기업의 내재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 계열사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의 소액 주주들의 부(富)가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다(송원근, 2008).

그러나 기업집단법은 그 취지나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재벌 혹은 재벌체제를 인정하는 법이다(정태인·새사연, 2012). 또 현재와 같은 내용들로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하여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들의 절대적이고 부당한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기업집단법의 준거 모델로서 독일식 기업집단법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할 경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가져올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며, 재벌개혁 논쟁이 기업집단법의 세부 법리 논쟁으로 흘러버림으로써 논점이 흐려질 우려도 있다(김남근, 2012b). 따라서 기업집단법에 관한 논의에서 다음 몇 가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형 발전모델의 특수성으로 '재벌체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기준에 대한 심의 혹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는 적어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시장에 의한 규율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당사자자본주의 모델에 입각한 개혁으로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적 고민이 포함된다.

둘째, 이러한 고민은 재벌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회사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의존하여 하든지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이해당사자들의 기업이론의 요소들을 해당 법률에 반영하고,<sup>12)</sup> 또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혁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sup>13)</sup>

셋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재벌 개혁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권을 복구하

키는 기업집단법(김상조, 2012b).

12) 이런 점에서 기업집단법의 제정을 '재벌개혁의 2단계' 운동이라고 표현한 김상조 교수는 기업집단법은 우리나라의 경제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보고 지금 당장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기업집단법 제정은 이러한 작업들을 토대로 하여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과제라고 한다(경제개혁연대, 2012).

13) 이와 관련하여 김상봉(2012)의 저술과 최근의 다양한 협동조합론 논의들에 따르면 노동자가 경영자 대표가 될 수 있는 노동자의 이사추천권 같은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론은 참여는 물론, 참여자들의 공공선,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기업 내 투자라는 관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혹은 재벌개혁이 추구하는 목표, 혹은 내재적 가치, 철학적 가치가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 (2) 보편적 복지나 재벌개혁이냐?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 중에는 재벌개혁의 문제를 보편적 복지로 대체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주장에 의하면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자본시장 통제, 전반적인 노동권 강화, (노조와 협동조합 등을 통한) 작은 경제주체들의 ‘민주적 담합’ 등이 경제민주화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실현하려면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과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한다(장하준 외, 2012).

그러나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이른바 스웨덴식의 대타협 모델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임원혁, 2005), 2~3대로 대물림되는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건드리지 않는 사회적 타협이다. 나아가 이 주장에는 스웨덴과 같은 타협을 기초로 한 성장/복지모델들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리얼한 고민이 없다(이병진, 2012a). 이러한 주장들은 삼성 재벌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독점 거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 규제, 은행의 역할 강화, 보편적 복지국가 강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정부의 개입은 과거 권위주의적 시장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시민권의 부활 혹은 시민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을 가고 있다.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보편적 복지가 경제주체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참여와 시민권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과제는 상호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동행해야 하는 문제이다.

경제민주화로서 재벌개혁과 보편적 복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첫째, 그동안 재벌 대기업이 수혜 받고 있던 감세조치를 철회하고, 총수(일가)의 지배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계열사간 출자에 대한 배당 과세(일명 재벌세) 등을 신설하여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sup>14)</sup>

두 번째 다른 이유는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복지국가 논의는 한국 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어떠한 경제 효율과 성장체제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이

14) 이외에도 경제민주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토지세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사회적 책임과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재벌개혁과 직접적 관련이 적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은 홍현호(2012)를 참조하기 바람. 반면 재벌과의 타협에 의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보편적 복지국가 강화론’은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재벌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교육, 복지 등 사회정책이 재벌개혁을 출발점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방안들과 상호보완적으로 조응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전모델 속에서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은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 (3)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

그동안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는 논거 중 하나는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목표처럼 재벌 규제가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수단 사이에 혼선이 있고, 또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sup>15)</sup>

사전적인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공정한 시장 규칙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에 대한 여러 사전적인 규제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많은 예외 규정들을 두거나, 현실추수적인 규제기준<sup>16)</sup>을 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에도 문제가 많았다.

그렇다면 사후적인 규제는 어떠한가? 신자유주의 불평등과 시장화가 정점에서 붕괴되는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2012년 버전의 재벌개혁'(김명권, 2012) 논의들 중에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계열(기업)분리명령제이다. 계열(기업)분리명령제는 정부정책이 아니라 법원의 기업 분리 또는 계열분리 명령을 통해 계열사를 분리하자는 것이다(새사연, 2012). 이는 재벌의 독과점 구조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등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후적인 해결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금융 부분까지 진출한 재벌 산업자본에서 금융을 분리하여 경제적 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면 계열분리명령제도 사후 규제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벌세와 같은 과세도 사후적인 규제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1990년대 초반 최고 32%에서 22%까지 법인세 인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로 실효 법인세율이 크게 하락하였다.<sup>17)</sup>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효법인세율 격차도 거의 없거나 중소기업이 더 높은 상황이다(위평량·채이배, 2010). 이런 상황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sup>18)</sup>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간 배당에 대한 과

15) "사전적인 행정 규제 중심의 대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정책들을, 되도록 사후적인 사법적 구제강화 정책들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헌법 합치적 양극화 해소방향"(전경련)

16)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동 제도 도입 시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을 40%에서, 25%로 하향조정되는 과정을 보면 이 비율은 재벌기업들의 출자액 비율 평균 수준 정도였다(송원근, 2008).

17) 10대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15.1%, 비 10대 재벌은 20.3%

18) 법인세 감면 조항은 없애고 대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자는 주장(유종일, 프레시안)은 시민경제의 한 요소로서 시민으로서 의무와 경제적 독립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세, 일명 재벌세를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사후적 규제와 관련한 여러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와 정상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2) 재벌개혁의 핵심은 총수 지배력 약화

###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명령제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벌개혁의 핵심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하여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의 절대적이고 부당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제도나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정책은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혼선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다.<sup>19)</sup> 또 재벌들은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투자 축소, 자본파업으로 대항하기도 하였다. 또 정부는 지배는 허용하되 ‘투명하게만’ 하면 된다는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수의 합법적인 지배와 계열사 통제를 허용하였다.

지주회사제도는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여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sup>20)</sup> LG재벌이나 SK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은 분가나 친족분리의 훌륭한 수단이자, 총수 지배력을 유지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었다. 이를 위해 총수 일가가 들인 돈은 전혀 없다. SK 재벌의 경우 SK(주)의 자기주식 취득에 이은 인적 분할, 그리고 주식교환을 통해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이것이 지주회사 전환의 목적 이고 결과였다(김진방, 2102). 그나마 순환출자 금지로 출자에 대한 규제의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출자 해소 유예기간 부여, 금산분리 완화 등으로 현재의 출자규제로는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약 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보다는 순환출자 금지 강화를 통하 여 출자를 제한하고, 나아가 “출자강제 또는 유도”를 통해서 무리한 계열사 확대나 출자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경제개혁연대, 2012.4.17).<sup>21)</sup>

또한 계열분리명령(청구)제 혹은 기업분할명령(청구)제와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직접적으로

19)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표로 하다 보니 이른바 “효율적인 출자”와 사익추구를 위한 비효율적 출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또 정부가 효율적인 출자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각종 적용 제외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규제 비용이 증가하였다(이상승, 2008).

20) 지주회사체제는 기업의 소유관계를 단순투명하게 하여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 결과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제한되고, 이 순환출자 때문에 생기는 부실 계열기업의 퇴출 경직성도 완화시킬 수 있다. 또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 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여 총수 일가 등이 과도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 간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해져 경영 감시도 한층 쉬워진다.

21) 이 방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물투자를 저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고, 소액주주 보호에도 효과가 있으며, 재벌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규제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적다(경제개혁연대, 2012.4.17).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총수의 지배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총수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전자는 지배주주가 주로 금융계열사를 이용하여 시장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의 적발,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계열로부터 분리를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단일 거대 독점기업에 대한 분할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 계열분리명령제의 경우, 문제는 방법인데 하나는 공정거래법에 포함시켜 일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교정 장치로 자리매김하여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법령에 포함시켜 체제적 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금산복합 그룹에 대해 산업자본 부분과 금융자본 부분을 분리하도록 감독 당국이 명령하는 형태로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전성인, 2012). 그러나 그 대상을 금융계열사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 등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비금융 제조업 기업들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계열분리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계열분리명령제와 더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하여 그동안 범외조직이었던 구조조정본부가 공식 기구가 법제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벌그룹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나 노동자 대표에 의한 경영 감시와 통제에 단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근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지주회사 규제 강화 방안들, 예를 들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강화(100%→2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비율 상향 조정(상장20%→30%, 비상장40%→50%)과 같은 방안들과 함께, 새롭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지주회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공동결정제도나 노동자의 경영 감시 등이 자회사 및 지주회사전체 차원에서 실현되려면 우선 노동자들의 기업 내 권력이나 사회적 권리가 대폭 개선되어야만 한다.

기업분할명령제는 거대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sup>22)</sup> 그 논란의 핵심은 독과점 자체에 대한 위법 판단 여부이다. 그러나 재벌의 독점과 집중이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이를 사후적으로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미국의 반독점법처럼, 비록 명령제 자체가 실제 시행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하더라도 이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재벌을 규율하는 효과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금산분리의 강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금융보험계열사를 통한 지배력의 확대와 유지이고, 이는 재벌 총수 일가 등이 금융보험계열사 이용하여 가입자들이 맡긴 자산을 경영권 보호와 같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벌 금융계열사들에 의한 과점산업화 현상은 경제민주화의 방안으로서 재벌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이외에도 금

22) 이 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있고, 2003년 KDI에서도 완화된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바가 있다. 또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검토된 적이 있다.

용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라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금산분리 방안으로 금융보험사의 일반계열사 보유지분의 의결권 한도 강화가 논의되는 것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재벌의 경우, 합병 등 경영권 변동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지분을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현재 제도를 이용하여 충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전면 금지하였다가 이후 15%까지 낮아진 것이다. 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가장, 유일하게 삼성 재벌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이러한 제한이 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의 권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었기 때문이다.<sup>23)</sup> 따라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의결권 행사 지분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sup>24)</sup>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재벌들이 금융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지는 논의도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게 허용하되, 금융자회사의 수나 규모가 일정 정도를 넘을 경우 반드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역시 삼성 재벌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왜냐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의무화되면 ‘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소유구조 고리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순환출자가 금지될 경우 순환출자를 단순히 해소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 면에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자본 변동이 요구되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은 삼성 재벌의 반대는 물론이고,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보호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 도입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는 원칙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지주회사제도 자체로는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약화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이다.

### 3) 공정한 법 집행,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득에 대한 과세

재벌 개혁의 문제는 총수의 지배력 약화라는 원칙의 문제이지만, 현실의 제도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의 엄정한 집행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 과거 지배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들이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것’이었고, 따라서 개혁 관련 법령이 엄격하게 집행되었다고 해도 결과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은 공정한 게임 규칙과 그 규칙의 준수, 법적인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것이며 우리사회가 건너뛴 ‘(구)자유주의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보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

23) 금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두 금융계열사의 지분(삼성생명 7.5%, 삼성화재 1.26%) 의결권이 제한된다.

24) 반대로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에 대해서는, 현행 9%(소유한도는 10%)에서 2009년 완화되기 이전 수준인 4%로 낮추는 데 대체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있는 회사기회 유용금지, 이사선임 등과 관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그리고 불공정거래관행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하도급분쟁 조정신청 제도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대형 유통업체 영업 제한 등이 보완되거나 새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들이다.

또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상법 개정 유명무실화에서 잘 드러나듯이, 규제의 목표는 총수일가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지향해야 것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계열사에 대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일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 기회유용에 대한 상법상의 제재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주주들이 승소하더라도 승소에 따른 이득이 해당 기업에 귀속됨으로써 소송의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총수 일가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회사기회 유용과 같은 관행들이 총수 및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시도들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허점이나 공백은,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와 법인세법 강화, 즉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가 높은 지분을 가진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넘어서 재벌 2,3세에게 부를 세금 납부 없이 대물림하는 편법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재벌은 정의선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총수지배 체제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글로벌스, 현대엠코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고,<sup>25)</sup>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사들여 총수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 수 있는 것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허점 때문이다. 즉 2011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증여의제이익 계산 과정에서 거래 비율 30%를 공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약하고(채이배, 2012) 또 지주회사의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에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30%공제를 없애고, 지주회사 예외 규정을 없애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4) 재벌개혁 없는 동반성장의 문제

이러한 문제 이외에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중심의 기업시스템이 초래한 수탈적이고 종속적인 기업간 관계, 그 결과로 나타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 편취는 소위 '1차 벤더'를 이용한 하청기업 '착취'의 예이다.<sup>26)</sup>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결과로 생긴 이득은 당연 하청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서 중층적인 하청구조를 만들어 재벌총수의 일가

25) 각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글로벌스(87.5%), 현대엠코(60.7%), 위스코(54.0%), 이노션(49.7%), 오토에버시스템즈(89.3%)이다(금융노조 노동연구원, 2012).

26) 대부분의 재벌그룹들은 1차 벤더를 설립하여 기존에 외주에 맡기던 것을 1차 벤더에게 '몰아주기'하고 기존의 하청기업들은 2차, 3차 벤더가 되어 1차 벤더에게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원청 재벌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1차 벤더에게 2차, 3차 벤더들이 착취당하는 먹이사슬 구조를 갖고 있다.

가 사취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다. 일감몰아주기는 또한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다. 그런데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상생’과 ‘동반성장’을 외치는 사이에 재벌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시장 영역을 장악해갔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제민주화는 구체적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재벌은 이러한 원하청불공정거래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편취하고 그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하여 2중, 3중의 수탈과 착취를 일삼고 있다. 이것은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회생시키는 경제구조,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고용관계 및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유지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재벌개혁이 없는 동반성장이나 상생은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이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원하청불공정거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재벌 계열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하도급분쟁 조정신청 제도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대형 유통업체 영업제한 등이 필요하다(김남근, 2012a). 이러한 제도들이 이미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재벌개혁이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수평적 협력관계, 대등한 파트너십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4. 나가며

외환금융위기 이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확산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고(최장집, 2006) 정부는 이러한 기반을 갖추는데 무능력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속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발전마저 용납하지 않는 성장지상주의 유행은 이러한 자본 혹은 재벌과의 연합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통제되지 않은 자유시장에서 재벌은 경제권력을 넘어 정치권력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관한 논의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로 가기 위한 재벌개혁의 본질은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대한 내부 의견 충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당장의 자본변동을 요구하는 재벌 지배구조 개편이나 법인세 증세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부담을 요구하는 등의 재벌규제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김병권, 2012b).

문재인 후보도 최근(10월 11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 골목상권 보호, 부자감세 철회, 조세정의 실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공정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이다. 한편 안철수 후보(10월 14일)는 재벌개혁의 방법으로서 여러 방안들을 제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처음보다 조금 후퇴한 것이긴 하지만 계열분리 명령제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등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발표했다.

물론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일부분이자 동시에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이 총수의 지배력 약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른 개혁 조치들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재벌체제 혹은 국가-재벌 연합에 의한 성장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기업이나 시장에서 단순한 자유의 확대가 아닌 참여와 자치를 통하여 시민권을 회복하고 신장시킴으로써, 민주적 시장경제에서 시민경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총수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력 집중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재벌개혁 정책이나 규제들이 정부를 통할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개입 역시 과거 권위주의적 시장 개입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의 억압으로 회귀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을 형성하고 확대하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어준 정부가 공공영역을 회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형성이라는 역할을 넘어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지금 시민권을 부활시키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선부른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재벌개혁과 관련된 개혁조치들은 상당히 후퇴한 채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만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2012년 대선 후보들의 공약

구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지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기득권체제의 청산
재벌 개혁	지배구조	논의 중	내부견제장치 강화 이사선임집중투표제의무화 소수주주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계열분리명령제 단계적 도입
	순환 출자	신규 제한, 기존 자율해소	기존, 신규 원칙 금지 (최근 기존 3년 유예기간)	신규금지, 기존은 자율에 맡기되, 미흡하면 재벌개혁위에 해소 조치
	출중제 부활	현행 유지	재도입(10대 재벌, 순자산의 30%), 특례조항 최소화	실효성이 중요, 일관성 유지 중요 (도입 없음)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사모펀드(PEF) 이용 금융회사 간접지배규 제 산업자본PEF출자지분율 18%→10%*	강화(산업자본취득한도9%→4%)	강화(산업자본취득한도9%→4%)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2009년 이전 환원, 예외규정 대폭 정리
	지주회사	논의 중	지주회사부채비율강화(200%→100%) 자회사/손자회사 최저지분비율(상장 20%→30%, 비상장40%→50%)	지주회사부채비율강화(200%→ 100%) 자회사/손자회사 최저지분비율(상장 20%→30%, 비상장40%→50%) 중소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 정 적용 완화
불공정 거래 관행	일감 몰이주기	사익추구행위로 엄벌	제재와 과세강화, 내부견제장치강화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금지
	골목상권 진출제한	골목상권 일정기간 보호	대기업 진출제한, 기존 대기업은 이 양권고, 불이행시 강제명령	소상공인 보호 차원 적극 추진
	불공정행위 징벌적배상	부당한 단가 인하까지 징벌 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	납품단가인가, 물품수령거부까지 확 대	실효성이 중요
위원회		???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

\* 금산분리에 대한 박근혜 후보 공약은 “강화를 고려하겠다”는 정도임. 제시된 방안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논의되고, 입법발의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방안임.

참고문헌

- 경제개혁연대 (2012.4.17), '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 재벌정책과 하도급정책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이슈」 2012.1호, <http://www.ser.or.kr>
- 경제개혁연대 (2010.8.19), 입법제안서 '대규모 자산 양수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http://www.ser.or.kr>
- 곽준혁 (2005)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한국정치학회보」, 39(3).
- \_\_\_\_\_ (2008) "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아세아연구」, 51(1), pp.133-63.
- 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2112) 「재벌연구보고서」, 금속노조, 9월.
- 김남근 (2012a) "중소상인 보호와 재벌개혁의 과제", 「시민과 세계」, 21호.
- \_\_\_\_\_ (2012b)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중) 국회 토론회 자료집.
- 김병권 (2012a)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방향",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 민노총·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주최 기획토론회 자료집, 2.15.
- 김병권 (2012b) "18대 대통령선거와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 「황해문화」, 가을호.
- 김상봉 (2012)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꾸리에.
- 김상조 (2011) "재벌 개혁 2단계 운동, '기업집단법' 제정하자",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1년 5월호.
- 김상조 (2012a) 『중흥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북.
- \_\_\_\_\_ (2012b)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민주정책연구원 용역보고서, 2012.7.
- 김선웅 (2006) "기업집단에 관한 독자적 규제 법률의 필요성과 내용", 「기업지배구조연구」, Vol.18(1), 좋은 지배구조연구소.
- 김진방 (201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사람과 정책」, 봄호.
- 김형기 외 (2012) 『새로운 진보의 길』, 한올아카데미.
- 리차드 대거(2007)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 「시민과 세계」, 제 10호.
- 송원근 (2008)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후마니타스.
- 위평량·채이배 (2010) "상장기업의 실효법인세율에 관한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0-09 (7. 20).
- 이동걸 (2012) "각 당 경제민주화 정책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 「민주」, 제 5호.
- 이병천 (2012a) "어떤 경제민주화인가-시장사회/경제에서 시민사회/경제로", 「시민과 세계」, 제 10호.
- 이상승 (2008) "재벌규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경쟁법 집행의 강화 및 기업집단에 관한 회사법의 도입", MS IT포럼 발표문.
- 임원혁 (2005) "한국경제와 재벌개혁", 「시민과 세계」, 제 7호 2005상반기.
- 임혁백 (2012) "한국민주주의의 성찰과 미래의 대안", 김형기·김윤태 엮음, 『새로운 진보의 길』, 한올.
- 장지상·이근기 (2012)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경제발전연구」, 18(1).
- 장하준 외 (2012)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키.

- 전성인 (2006) “기업집단 규율의 이론적 측면”, 『기업지배구조연구』, Vol.18(1), 좋은지배구조연구소.
- 정태인·새사연 (2012) 『리셋코리아』,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 채이배 (2012) “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이슈 & 분석』 2012-1호, 경제개혁연구소.
- 최장집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 필립 페턴 (2012) 『신공화주의: 비지배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박준혁 역, 나남.
- 홍헌호 (2012)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 mimeo.
- Casassas, D. (2008) “Basic Income and the Republican Ideal: Rethinking Material Independence in Contemporary Societies”, de Wispelaere, J. et al. (ed.) *Basic Income Studies*. Volume 2, Issue 2



## 사회양극화와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

최 배 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I. 사회 양극화의 기원과 일자리

- 사회 양극화의 의미 ~ 사회 불평등의 심화, 특히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
- 그 결과 사회의 수직적, 수평적 이동성 악화와 빈곤의 대물림을 야기하는 등 이른바 ‘신봉건제 (neofeudalism)’의 등장
- 사회 양극화는 일자리 양극화에서 비롯

#### (1) 일자리 양극화의 기원

- (학계의 일반적 의견은) 기술진보와 글로벌화의 산물
  - 기술진보 ~ 80년대 초 컴퓨터 혁명, 90년대 기술혁명 가속화 ⇒ 자동화와 노동방식 변화 ⇒ 중간 숙련을 요구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상적 혹은 정형화된 업무가 기술에 의해 대체
  - 글로벌화 ~ 고숙련 일자리 및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sup>1)</sup>의 증가, 그리고 중간 숙련 일자리는 해외 저임금 노동에 의해 일자리 상실이라는 ‘일자리 양극화’ 대두와 임금불평등 초래
- ⇒ 이처럼 기술진보와 글로벌화가 상호작용하며 (제조업 부문에서) 중간숙련(소득) 일자리가 감소하며 ‘일자리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를 초래
-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탈공업화’를 간과, 즉 글로벌화와 기술진보도 기본
- 
- 1) 육체적 상호작용과 대면 접촉이 필요하기에 글로벌화와 기술진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저숙련 일자리(웨이터, 헤어드레서, 의료치료 보조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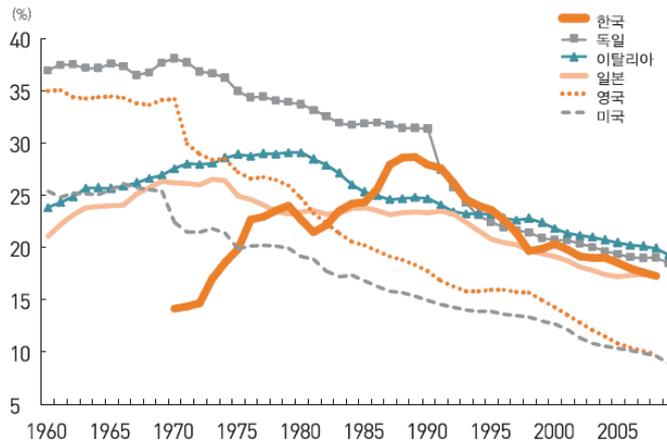
적으로는 탈공업화에서 비롯

(2) '탈공업화의 저주?'

□ 산업화 원료와 사회적 탈구

- 70년대까지 주요 선진국의 산업화 원료 및 제조업 기술의 평준화 ⇒ 제조업의 공급 과잉과 경쟁 격화 그리고 자본수익률 하락<sup>2)</sup>
- 60년대 (민주주의 발전-경제성장-복지사회 건설을 결합시킨) '노동과 자본 타협'의 종언 ⇒ 자본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감세, 긴축, 공기업 민영화, 탈규제, 시장개방 등)의 도입과 자본의 탈제조업(금융경제화)으로 대응한 반면, 노동은 실업 증가(일자리 감소)<sup>3)</sup>와 사회복지 축소 등에 직면
- 제조업의 일인당 생산성 증가와 제조업 비중의 축소(그림1 참조) 그리고 제조업을 대체할 산업의 미비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의 축소와 대체 일자리 부족에 직면

그림 1. 주요국 제조업 고용 비중의 추이



□ 금융경제화와 글로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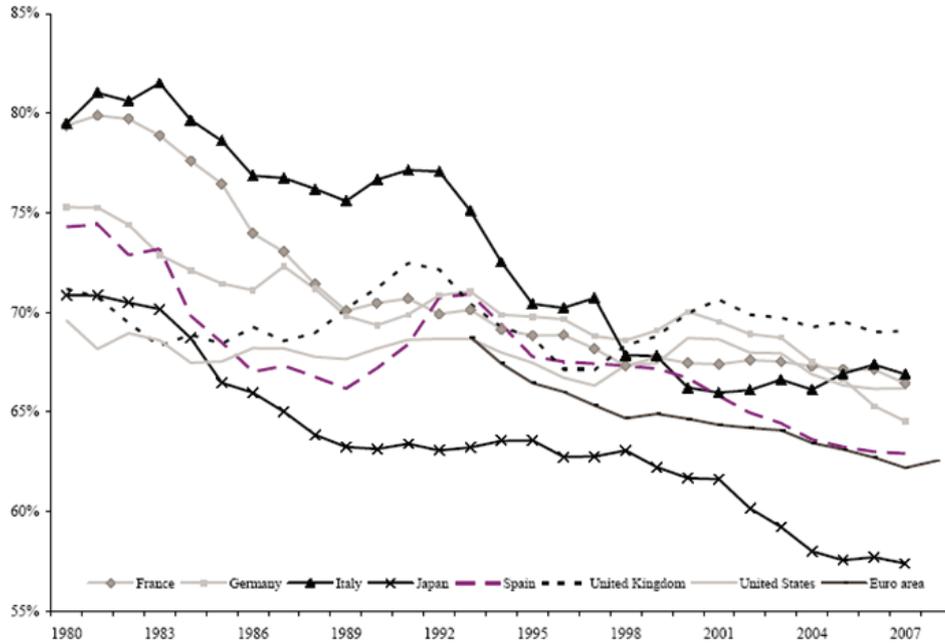
- 선진국의 산업화 원료로 경제력 다원화(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 변동환율제(화폐의 상품화)와 글로벌 자본시장의 통합 그리고 은행위기의 빈도 증가
- 미국은 탈공업화의 출구로 금융을 새로운 성장 동력(미국 헤게모니 유지 수단)으로 선택(금융경제화) ~ 70년대 펀드자본주의(그림자금융시스템)의 등장과 자본시장 개방 위한 제도 정비 ⇒ (월가와 워싱턴이 유착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에 대한 규제 철폐와 금융자본의 영향력 증대<sup>4)</sup>

2) 미국의 경우 제조업의 자본수익률이 50년대 전반에 30% 안팎에서 80년대는 10% 안팎으로 하락했고, 독일은 35% 안팎에서 10%대 초로, 일본은 60년대 40%대에서 80년대 15% 안팎으로 하락

3)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70년대 10년간 26% 증가에서, 80년대 20%, 90년대 15%, 2000년대 2%(2000~07년간은 7%)로 지속적으로 하락

⇒ 기업 경영에 대한 금융자본의 영향력 증대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노동자의 복지가 악화<sup>5)</sup> ⇒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노동시장 확립<sup>6)</sup>과 소득불평등의 심화<sup>7)</sup>

그림2. 서구 주요국에서 노동소득의 비중



- 90년대 초 경기침체 이후부터 ‘고용 없는 성장’ 현상<sup>8)</sup>의 등장 ⇒ 장기 실업의 사회문제화 ⇒ ‘신 자유주의적 포퓰리즘’ 선택 = 소비가 70%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 만들기와 경기 부양은 통화완화 정책과 소비 부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양자를 결합한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금융 지원<sup>9)</sup>: 클린턴 행정부의 ‘국민주택 보유 증대 전략’과 부시 행정부의 ‘소유자사회’론 ⇒ 주택

- 4) 규제, 조세, 무역, 정부지출의 우선순위, 통화정책 등에서 임금소득자의 희생 속에 자산가와 기업에게 유리하게 규칙들이 변화. 첫째, 금융의 헤게모니는 노동시장의 경쟁 격화, 고용보호법의 약화, 노조 약화
- 5) 전 세계 노동자 소득의 비중은 1980년과 2010년 사이에 7% 하락. 즉 임금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성 증가에 뒤쳐졌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73~2007년간 생산성 증가율은 83%였던 반면, 남성을 기준으로 한 실질 임금의 상승률은 5%에 불과. 한편, 노동소득의 역압은 국내 시장(수요)의 확장을 제약함으로써 다시 시장 개방 확대의 명분으로 작용
- 6)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사회보장프로그램이 (특히 공화당 정부에서) 축소되며 사회보장지출이 축소. 예를 들어, 80년대 이후 미국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크게 후퇴. 즉 70년대까지 미국은 일자리 회복을 위한 정책의 선두 국가. 예를 들어, 70년대 후반 민주당의 카터 행정부는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고용 프로그램 등을 도입했고, 최대 70만 명 이상에게 혜택 제공.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큰 정부’로 비난한 레이건 행정부(1981~88년)는 이들 정책을 폐기하고 기금을 대폭 삭감하고 훈련을 민간부문으로 이전. 무엇보다 **최대 6개월간 실업 급여 지급과 직장의료 보험 등 일자리와 연계된 사회보장 체계의 도입**
- 7) 한 경제주체(가계와 기업 등)의 부채는 다른 경제주체인 금융기관의 자산을 의미하는데 가계 부채(GDP 대비) 비율 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부채상환(debt service) 부담이 90년대 중반부터 상승
- 8) 협의의 ‘고용 없는 성장’은 경기 순환상의 경기회복 국면에 8분기(24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 현상을 일컫음
- 9) 월가와 시민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환영하였다 월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원에 환호하였고 시민은 주택가격의

가격 하락과 금융위기

- 글로벌화 ⇒ 저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의 타격과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노동력 증대.<sup>10)</sup> 즉 자본 및 숙련 집약적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화 국가에서 교역부문의 저숙련 노동력 일자리를 축소시킨 반면, 글로벌 제조 공급망의 확대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이전<sup>11)</sup>
- 공공서비스나 고령화 등으로 공공부문이나 의료보건 등 비교역부문의 수요는 증가<sup>12)</sup>

□ 금융경제화와 IT 혁명

- 경제의 금융화는 IT 혁명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즉 글로벌 자본시장의 통합은 정보기술혁명으로 가능<sup>13)</sup>
- IT 혁명으로 표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의 코딩화가 가능해짐으로써 산업화 시대에 상대적 고임금직종(화이트칼라)이었던, 즉 단순 지식 혹은 표준적 지식을 사용하는 일상적 업무 혹은 정형화된 지식이나 숙련을 사용하는 일자리가 기술에 의해 대체<sup>14)</sup>
- 반면 문제해결 능력과 정보 획득 및 활용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해나가는 능력의 보유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sup>15)</sup>
- 이처럼 **탈공업화와 글로벌화 그리고 기술진보의 상호작용이 '일자리 양극화'로 귀결**<sup>16)</sup>
- IT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의 경우 표준화된 지식 보유자의 장기 보유가 불필요해지고, '적기(Just-in-Time)' 생산 및 공급 방식이 강화 ⇒ **일자리 단기화와 노동의 유연화가 경향화**
- 70년대까지 노동력은 기업에게 준고정자산으로 간주, 즉 기업은 노동력의 훈련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을 축적했기 때문에 기업은 침체기에서조차 노동력을 유지했다가 회복기에 빠른 생산 회복을 추구했으나 오늘날 노동력은 상시적으로 조절과 처분 가능한 대상이

상승과 주택 소유 가능성으로 지지하였고 월가 및 시민의 지지와 더불어 주택경기의 활성화 및 주택자산 가치의 증가 자산효과에 기초한 경기 부양과 고용 증대 기대로 정치권 역시 여야 모두 찬성

- 10) 사람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비교역 특성을 갖는 저숙련 서비스부문 일자리, 예를 들어 건강 보조, 안전요원, 병원 잡역부, 청소원, 서빙하는 사람 등에 대한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1) 예를 들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200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50만 명과 남미 지역에서 47만 7,500명 등 해외에서 290만 명을 새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내 일자리는 오히려 86만 4천개가 감소
- 12) 미국의 경우 1990~2008년간 2천7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중 98%가 비교역부문, 특히 정부 및 헬스 분야 등 비교역부문에서 창출
- 13) 정보통신기술은 경쟁의 자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통신과 자료송신의 속도 증대 및 비용의 하락은 지리적 거리를 소멸시키고 경쟁의 장애를 제거. 또한, 금융부문의 규제 완화와 경쟁의 증가 그리고 금융공학과 위험관리기법의 발전 등 역시 IT 혁명 없이는 불가능
- 14) 미국의 경우 영업직, 사무행정직, 제조부문 생산직, 장비 및 기계 조작 인력 등 4개 직업은 1979년에 전체 일자리의 57.3%를 차지했으나 2007년에 48.6%, 그리고 2009년에는 45.7%로 축소
- 15) 미국에서 2001~09년간 생산직은 270만개, 거래직은 70만개가 감소한 반면,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480만개가 증가
- 16) '일자리 양극화'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유럽연합(EU)에서도 1993년부터 2006년간 중간소득층의 일자리가 8% 이상 감소

된 결과 경기가 후퇴할 때마다 기업은 고용을 줄여 생산성과 수익성 **유지를 추구**<sup>17)</sup> ⇒ 파트타임, 임시직, 파견직 노동자 등이 증가하는 배경

### (3) 노동환경의 변화와 경제의 지속가능성

#### □ 탈공업화 시대와 산업사회 인력 공급 패러다임의 비대칭성

- 산업사회는 표준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대량생산시스템**에 의존 ⇒ 따라서 개인은 표준화된 지식의 다량 습득이 필요했고, 국가는 기업이 요구하는 표준화된 지식보유자의 대량 공급에 초점 ⇒
- 그런데 탈공업화에 따른 고부가가치화는 **아이디어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 ⇒ 그 결과 사회는 표준화된 지식의 보유자보다는 문제해결(상품개발) 능력을 보유한 노동력이 필요, 즉 차이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요구(이는 아이디어집약적 생산물의 특성에서 비롯. 자동차산업 대 음원·게임·영화 등을 비교)
- ▷ 대량생산시스템은 자본의 중심적 역할과 표준 지식 보유 노동력의 경험이 보완적 역할을 하기에 기업의 경우 노동력의 장기 보유(종신고용)가 유리했던 반면, 아이디어집약적 생산시스템에서 표준 지식 보유 노동력은 더 이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없음
- 그런데 현재의 인력 양성 및 공급 방식은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의존 ⇒ **‘일자리 비일치성’(job mismatch)과 청년 실업 그리고 ‘일자리 단기화’ 문제가 그 결과**<sup>18)</sup>
- ▷ 실제로 IT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경기회복’ 현상이 등장하면서 청년 실업의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 즉 경기침체는 표준화된 지식을 보유한 중간 숙련 보유 인력을 고용시장에서 탈락시킨 반면, 문제해결 능력 보유자가 공급되지 않는 결과가 청년실업 사태

#### □ 일자리 양극화와 지속불가능한 경제

- 중간소득층 일자리의 감소는 중산층의 소득 감소와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불평등은 사회불평등으로 확대되며 성장의 지속에 부정적으로 작용
- 다른 한편 여성경제활동의 증가와 청년실업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 ⇒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17) 예를 들어, 1973년 침체기에는 GDP가 1% 하락할 때 고용과 생산성은 각각 1/3과 2/3를 분담. 즉 1990년대까지 기업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감축이나 임시직 해고 등을 통해 노동비용의 일부를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자연스럽게 수용.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 후퇴에 대해 기업은 98%를 고용 축소로 대응

18) 이코노미스트(2011년 9월 10일)는 2011년 기준 전 세계 기업의 34%가 자신이 원하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 2007년에 OECD의 실업률은 비청년과 청년 실업률이 4.9% 대 14.2%였던 반면, 2011년 1분기에는 7.3%와 19.7%로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청년실업 문제는 크게 악화. 미국의 청년(18~24세) 고용 비중은 노동부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48년 이래 가장 낮은 54%를 기록.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 청년 실업자는 7천5백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이른바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 전체 청년층의 약 12.5%에 해당하는 1,670만 명 수준

구조 변화(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와 일자리 창출 시스템 약화 ⇒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경제

## II. 한국 사회의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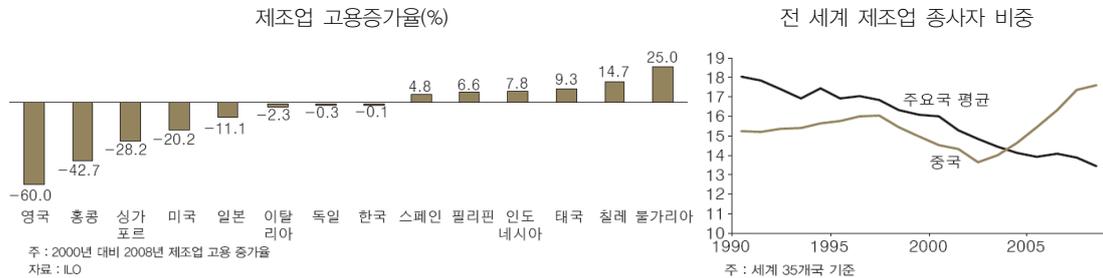
### (1) 한국 모델의 이중성 = 압축적 공업화와 급진적 탈공업화 = 악성 '일본병'<sup>19)</sup>

- 분단체제 하 압축적 공업화로 산업구조의 자기완결성 결여<sup>20)</sup>와 과도한 대외의존
- 90년대 초부터 탈공업화<sup>21)</sup> 진행 속에 자본시장 개방(글로벌화 추진<sup>22)</sup>),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간 소득 일자리 감소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양극화와 고용불안정 증가<sup>23)</sup>, 임금소득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의 후퇴, 수출의존도 증가 등 이른바 '한국 경제의 일본화가 급속 진행
-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제조업의 일인당 부가가치가 급증<sup>24)</sup>하는 가운데 진행(그림 3 참조) ⇒

19) 제조업 중심의 모노컬라 산업구조를 가진 경제의 경우 제조업의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 + 단기 수익성을 추구 하는 금융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 증대 ⇒ 기업에게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의 압력으로 작용 ⇒ 그 결과 기업은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노동력의 사용 증대, 생산자동화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 ⇒ 임금 둔화와 고용 약화 등은 내수를 약화시키고, 결혼을 저하와 저출산(경제활동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추세를 심화 ⇒ 경제 활력의 저하와 재정 악화 그리고 수출에 죽고 사는 경제구조라는 악순환 고리 형성. 참고로 기업의 국내 고용 규모 축소도 대기업이 주도. 1990~2008년 사이에 고용 규모의 변화를 보면 신닛테츠(新日鐵)는 55,255명에서 15,567명으로,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은 44,534명에서 33,923명으로, 도시바(東芝)는 72,580명에서 34,096명으로, 소니는 18,188명에서 18,040명으로, 파나소닉은 45,191명에서 44,743명으로, 닛산(日産)은 57,964명에서 30,815명으로 축소. 토요타만 70,841명에서 71,503명으로 근소한 증가

20) 예를 들어, 식량 자급률이 1970년 80.5%에서 2011년까지 22.6%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나 중소기업 기반 취약 그리고 원천기술 확보의 부족 등

21) 제조업 종사자는 1991년 515만6천명(27.6%)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1997년 453만7천명(21.4%), 2000년 429만4천명(20.3%), 2007년 411만9천명(17.6%), 2010년 402만8천명(16.9%)으로 계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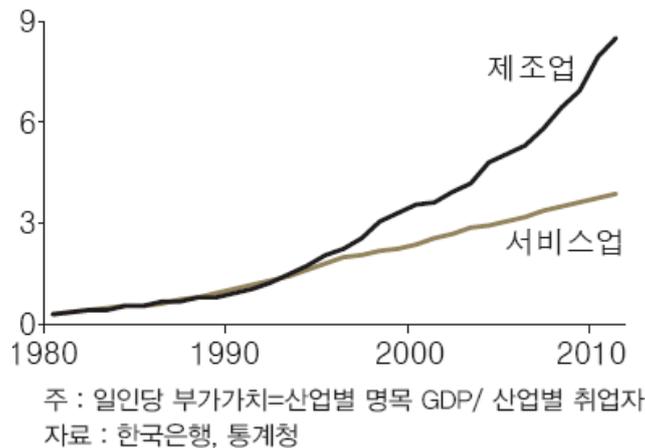


- 22) 80년대 자본시장 개방 압력 증대를 김영삼 정부에서는 글로벌화(세계화)를 국정 목표로 추진
- 23)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 근속의 나라로 근속년수 평균값은 5.3년에 불과. 국세청이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 중 근로소득자(직장인)의 비율은 52.4%에 불과하고, 이조차 40대는 40.3%, 50대는 30.1%로 급감. **일자리 단기화는 높은 자영업자 비중으로 귀결.** 자영업자 비중은 2010년 기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29%
- 24) 제조업 명목GDP를 제조업 취업자로 나눈 제조업의 일인당 부가가치는 1990년 이후 급증

그 결과 90년대 초까지 차이가 없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인당 부가가치는 90년대 중반 이후 확대<sup>25)</sup> ⇒ 즉 제조업부문에서 고용 창출 역량의 감소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속에서 진행된 반면, 서비스부문 취업자의 증가는 저부가가치 일자리의 증가로 연결 ⇒ 제조업의 비중 감소가 양극화로 이어진 배경=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부문 종사자의 감소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부문 종사자의 증가는 중간소득층이 하향 이동하는 ‘일자리 양극화’<sup>26)</sup>를 의미

-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의 확대는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를 심화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교역 급증이 저임금 미숙련노동력에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고임금 숙련노동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 저임금 미숙련노동력의 타격과 중간소득층의 감소는 한·중 수교 이후 부도업체와 자영업의 급증에서도 확인<sup>27)</sup>
- 일자리 창출 역량의 급감과 대기업의 역할 쇠퇴<sup>28)</sup> 그리고 청년실업<sup>29)</sup>

그림 3.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인당 부가가치



- 25) 2011년에 양자는 각각 8,500만원과 3,800만원으로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두 배 이상을 기록
- 26) 1993~2002년간 전체적으로는 보수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중위권 직업인 40~70%의 직업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정체 상태였던 반면, 제조업에서는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수가 모두 감소. 가장 많이 감소한 일자리는 가죽, 가방, 신발, 섬유, 가구, 의복, 모피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집중되었고, 가장 많이 증가한 일자리는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행사 및 단순서비스직, 교육서비스업 등
- 27) 중국산 수입이 1992년 37억2,494만 달러에서 1995년 74억119만 달러로 두 배 증가하는 동안 부도업체는 1만 769개에서 1만3,992개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8) 한국의 경우에도 1998~2008년 대기업(300인 이상) 종사자는 22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27.2%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767만 명에서 1,146만 명으로 49.4% 증가. 오늘날 민간 100대 그룹 전체 자산의 46.4%를 차지하는 삼성·엘지·현대차·SK 등 4대 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20% 안팎이나 고용의 규모는 2.1%에 불과
- 29) 15~24세를 기준으로 삼는 국제 기준의 청년층 고용률을 보면 OECD 평균은 1990, 2000, 2010년 각각 49.1%, 45.5%, 39.5%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32.5%, 29.4%, 23%로 2000년대 이후 빠르게 하락. 15~29세 기준 고용률도 2006년 43.4%에서 2011년에 40.5%로 하락.

그림4. 가계와 기업 저축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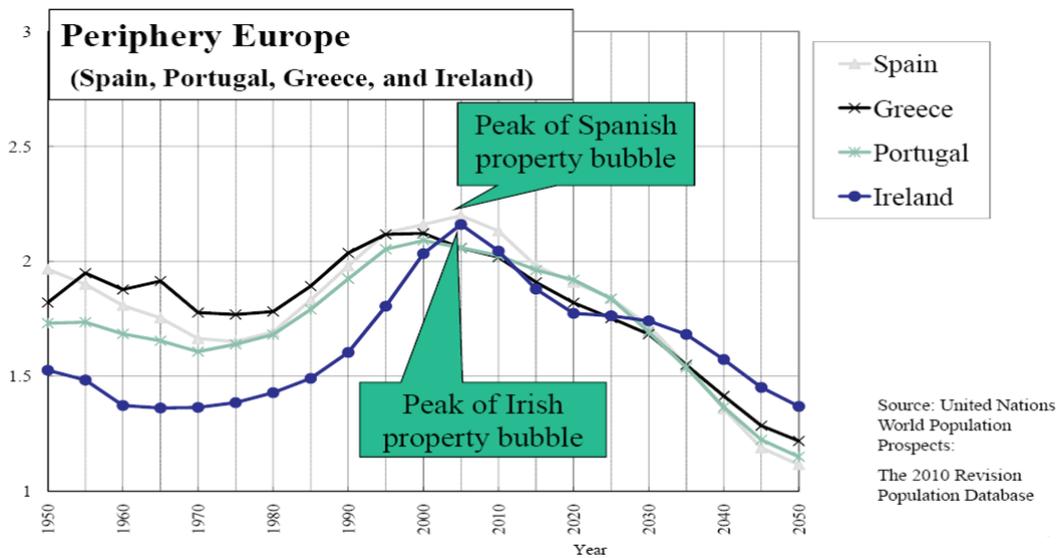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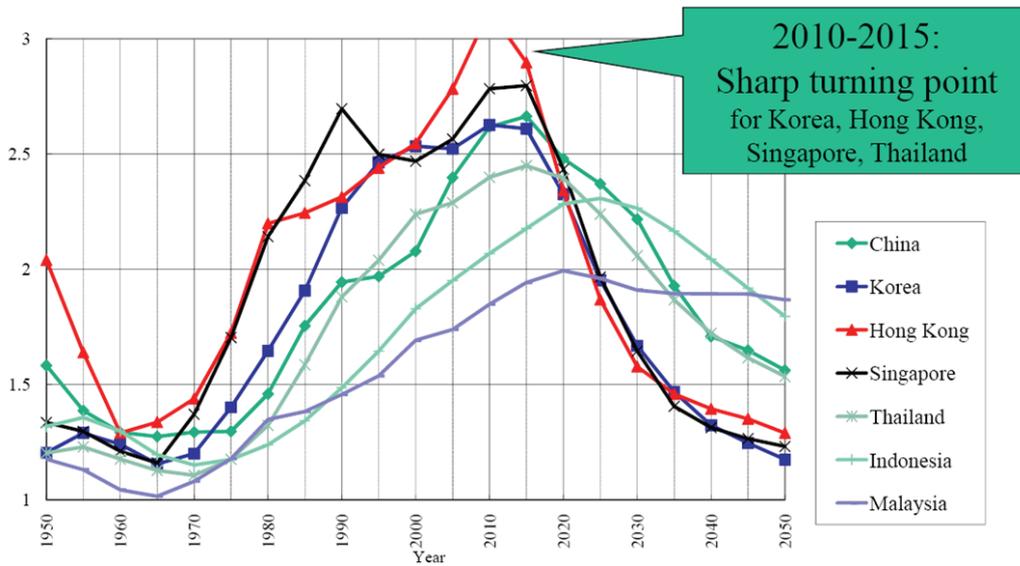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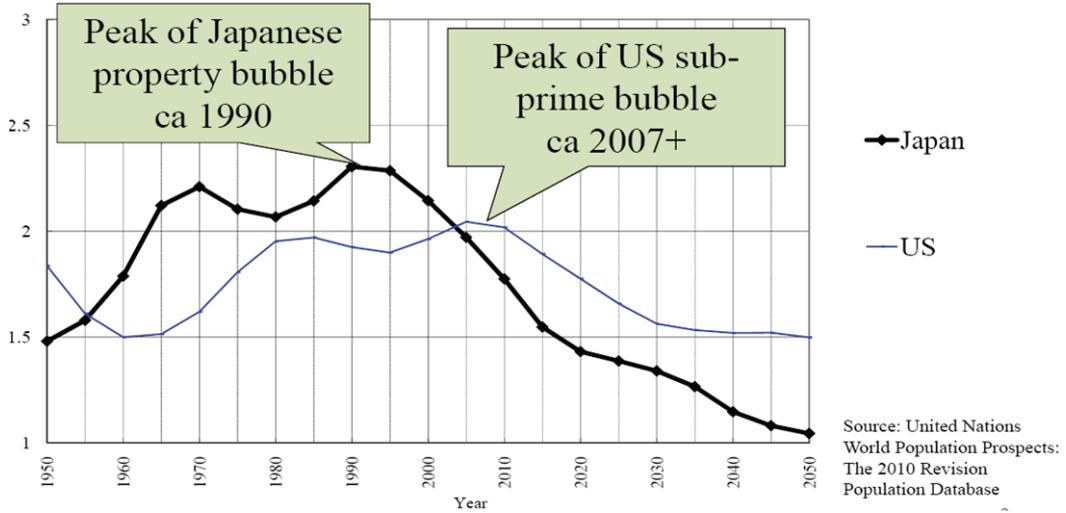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 (2) 파국과 레짐 체인지의 갈림길

- 사회양극화 심화는 금융(부채) 주도의 성장 모델로 전환 불가피
- 한국판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는 위기로 발전 ⇒ 부채 주도 성장 추구(예: 김대중 정부의 카드사태와 이명박 정부의 서민주택 소유 확대와 가계부채 사태 등)
- 자산시장 붕괴와의 결합으로 시스템 위기(꼬리리스크)로 발전 가능성 고조 ~ 일자리 창출 역량 감소 +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된 가계부채 + 인구오너스 시대 전개 + 과도한 대외의존도와 글로벌 경제의 장기 저성장 등이 결합되면서 한국 경제 붕괴 가능성(그림 5 참조)
- 좋은 일자리 창출 시스템 만들지 못하는 한 한국 경제는 지속 불가능
- 좋은 일자리와 성장의 동시 달성 위해서는 가치 창출에서 노동력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 필요 ⇒ 일자리 창출이 약화된 성장률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성장 체제의 전환이 시급

그림 5.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시장 붐과



### (3) 새로운 패러다임과 레짐 체인지

- 고용에서 창작 시대로 전환 ⇒ 교육혁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 역할의 약화<sup>30)</sup>와 아이디어집약적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부응하는 창작 능력을 가진 인재 육성
- 공동창조가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앱스토어 모델, 소셜 매뉴팩처링, 이타자리형 비즈니스 모델, 협력적 제조, 클라우드 소싱)
- 현재 공급되는 노동력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차이 부족 ⇒ 최고가 아니라 자기 칼라(차이)를 갖는 인재 육성(Not Best, But Unique) 그리고 이를 위해 '모두에 대한 수월성 교육'의 보장 ⇒ 동기 유발 -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교육-의료-주거의 사회적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sup>31)</sup> 정년 연장, 포괄임금산정제<sup>32)</sup> 폐지
  
- 자치와 협력의 강화 그리고 일자리 ~ 중앙과 지역 단위 모두에서 창작의 지원을 위한 사회인프라(법률 및 금융인프라, 공공테크숍) 정비와 지원, 사회서비스 부문의 업그레이드<sup>33)</sup>, 협동조합형 마을사업 활성화
  
-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인력수급 지원책으로 근로장려금 지원 등

---

30) 현재의 대기업은 2차 기술혁명의 산물

31) 한국 전 산업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4백~2천8백 시간(OECD 최장노동시간 국가). 반면, 유럽의 경우 1천6백~1천8백 시간에 불과

32)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 반면 원칙적인 임금산정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

33) 예를 들어, 돌봄 노동 육성이나 다문화가정도우미 등

## 〈부록〉 공동창조(co-creation)와 협력적 제조(collaborative manufacturing)

- 불특정다수 즉 대중들이 직접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은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설계 및 생산을 하는 체제

### 〈사례〉 퀴키(quirky)

- (1) 독창적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상품화하고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기업
- (2) 가치 창출 방식 ~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도 댓글을 달거나 투표를 함으로써 참여, 많은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제품 평가를 통해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상품화. 아이디어 확정 과정에도 개선점 제안 등 공동창조 방식, 이른바 ‘커뮤니티 큐레이션<sup>34)</sup>’ 방식을 사용한다.
- (3) 장점 ~ 아이디어 제안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대신 아이디어 등록비로 10 달러를 받고 만들어진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자신이 소유한다. 이처럼 기존 아이디어 개발자가 생산과 판매를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했던 반면, 퀴키의 경우 아이디어 개발자는 10 달러라는 적은 비용으로 생산과 판매를 모두 이룰 수 있다. 다른 한편 기존 제조업자는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거의 자기 회사 직원에게 의존하여 아이디어 풀(pool)이 작았지만 퀴키는 대중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모집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및 기획 비용(R&D)과 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품 공급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감도 증가한다.

---

34) 큐레이션 = 다른 사람이 제안하거나 만들어놓은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일. 큐레이션 과정 속에서 회원들은 영향도(influence)라는 점수를 얻고, 해당 상품의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자로서 수익 배분의 대상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아이디어는 회사 내부의 전문가들이 연구, 디자인, 생산, 판매를 진행하여 시장에 나가게 되고 수익을 참여자와 배분한다. 그렇게 채택된 제품을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대형 유통망을 통해 판매한다. 전자의 경우를 통해 판매되면 그 제품의 개발자는 그 제품의 이익의 30%를 가져가고, 후자의 경우를 통해 판매되면 10%를 가져간다. 즉 함께 만들고 판매하여 수익을 아이디어 제안자와 공유한다.



## 돈벌이 경제 VS 살림/살이 경제

홍 기 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살림/살이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돈벌이의 문제와 동일시해 버린다. 실제 그렇다. 옛날 양주동 선생이 동경 유학 시절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진 다른 두 명의 유학생들과 함께 벽에다가 “움직이면 손해다(動卽損)”라고 써 붙이고서 내 천(川)자로 길게 누워 며칠을 버텼다고 하던가. 요즘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지하철을 타든, 게임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책을 읽든 무엇을 하든 일정한 돈을 써야만 가능하다. 어쩌다 일자리라도 잃어 수입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야말로 “움직이면 돈이다(動卽錢)”라고 써 붙이고 곰처럼 동면 상태라도 들어가야 할 판이다. 물론 동굴의 월세 방값은 미리 내야 하지만.

이러한 경험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극히 익숙해 있는 우리로서는 돈벌이와 살림/살이가 본래 별개의 행위요 영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의아할 수밖에 없다. 돈벌이와 연결되지 않은 살림/살이도 있단 말인가? 그렇다. 돈벌이는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살림/살이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것도 그 여러 수단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돈이 많건 적건 버는 문제와 관련이 있건 없건 그것과 무관하게 고민해야 하는 살림/살이의 영역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해 본 댓자 많은 분들은 그저 알쏭달쏭하게 여기실 뿐이다. 그러면 돈벌이와 무관하거나 관계가 대단히 희박한 살림/살이 형태를 실감하기 위해서 가장 극명하고도 쉬운 경제 형태부터 먼저 생각해보자.

## 생계 경제: '돈 사러 간다'

생계 경제(subsistence)라는 개념은 엄밀하게 정의되어 쓰이는 개념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물질적인 자급자족을 목표로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의 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식량 의복 주거에 필요한 물자는 사냥, 채집, 농경 등의 활동으로 조달되며, 생산의 '잉여'가 크게 축적되지 않는 낮은 생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림/살이의 문제가 당연히 돈벌이의 문제와 무관하게 돌아가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화를 농사, 길쌈, 채집, 사냥, 낚시 등으로 해결하며 문화적 정신적 생활에 있어서도 공동체 내에서 욕구와 그 충족 수단 모두가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폐를 많이 축적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지도 않으며, 아예 자신의 경제 활동 즉 살림/살이의 여러 문제들을 돈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고 사고하는 버릇조차 낫설다.

물론 우리는 산속이나 오지(奧地)에 고립된 채 살아가는 원시 부족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근대화와 상품화가 시작되기 이전 상태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상당히 근대화되고 화폐화된 도시에서의 자본주의와 공존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생활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런 생활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도시에서 흘러들어오는 각종 제조업품도 사용하며 (이제는 아프리카나 아마존 오지의 원주민들조차 그러하다), 그것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화폐를 분명히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느 시점까지는 이들에게 있어서 경제 활동이란 돈벌이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의 살림/살이이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대략 삼사십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다. 읍내에서 상당히 떨어진 벽지 산촌에 사는 이들은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마을 단위에서 해결한다. 물론 이들도 근대화된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마을 단위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삶의 수단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읍내의 치과에도 가야할 때가 있고, 손주놈이 중학교 들어가면 좋은 가방도 하나 사 주어야 하며, 설이 되면 세뱃돈도 준비해야 한다. 이들은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이럴 때 쓰려고 장롱 속이나 뒤주 어딘가에 꼬깃꼬깃 박아둔다. 이게 '돈 구린내'라는 말이 생긴 사연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둔 돈이 부족하면? 호미나 낫을 하나 들고서 산으로 올라간다. 더덕이든 도라지 또 그 밖의 무엇이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짹짹 긁어모은다. 그래서 장이 열리는 날 그것들을 가지고서 기차타고 (혹은 기차삿을 아끼기 위해 이고지고 걸어서) 장에 가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있다. 그래서 돈을 구해온다.

이런 것을 부르는 우리나라 옛날 말에 '돈 사러간다'는 표현이 있었다. 실로 재미있는 표현이다. '팔러가는' 것이 아니라 '돈 사러 간다'. '팔러간다'는 것은, 근대에 들어 유럽에서는 '실현(realize)'된다는 말로 표현되는 특수한 행위이다. 즉 마르크스의 표현대로 화폐라고 하는 성스러운 존재의 인

정을 받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약이 벌여지는 순간이요, 베블린이 지적한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존재인 화폐로 바뀌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화폐란 그렇게 신비롭거나 신성하거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얻어내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그저 머리를 빗을 참빗처럼 등을 긁을 효자손처럼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생필품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며, 장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생필품 하나를 ‘사러 가는’ 것에 불과하다. 생계 경제에 있어서 화폐와 돈벌이가 살림/살이의 한 부분으로 포괄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어주는 표현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생계 경제가 ‘돈벌이 경제’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다. 어떤 서양 변호사 한 명이 업무로 인도에 갔다가 시골길 진창에 차가 빠져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몇 시간 쯤 지났을까. 멀리서 터덜터덜 시골 버스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고 있었다. 버스 안은 사람과 온갖 짐으로 꽉 차있었고 하다못해 천장과 버스 옆에도 사람들이 줄줄 매달려 있는 풍경이었다. 버스의 시골 사람들은 곤경에 처한 이 서양인을 보고 모두 내려 차를 끌어내어 주었다. 서양인이 답례를 하려고 돈을 좀 꺼내들었더니 버스 운전사가 말한다.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돈이 필요 없답니다.”<sup>1)</sup>

이 풍경이 대략 90년대 초반이었던 듯하니,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은 지금의 인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전통적인 생계 경제에서 화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재미있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것이다.

##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

이제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해보자. 2장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경제’라는 말 속에 이 두 개의 전혀 독자적인 정의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근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강조한 경제학자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조인 칼 멩거(Carl Menger)라고 칼 폴라니는 지적하고 있다. 경제학 이야기는 2장과 3장으로 미루고, 폴라니와 멩거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이 두 개의 경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해 본다. 먼저, 살림/살이 경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형 무형의 수단을 조달하는 행위.<sup>2)</sup>**

1) Paul William Roberts, *Empire of the Soul: Some Journeys in India*. (Toronto: Stoddart, 1994).

2) 여기서 내가 내린 정의는 멩거나 폴라니의 정의와는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내가 볼 때에 멩거나 폴라니 모두 이러한 ‘실체적’ 경제의 정의에서 물질주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다. 1923년 사후 출간된 [일반경제학원리 2판에 보이는 멩거는 1871년의 1판에서 자신이 제시한 주관적 효용의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주관적 효용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인간의 기초적 욕구(Bedürfnis)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생리적 신체적인 욕구를 강조

복잡한 것 같지만, 그야말로 우리말 살림/살이 그대로의 뜻이며, 이것이 경제라는 말의 뜻이라고 해도 아무도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막상 경제학 교과서나 사전을 찾아보면 전혀 다른 방향의 정의가 튀어 나온다. 먼저 루트리지(Routledge) 출판사에서 나온 경제학 사전의 'economy' 항목을 찾아본다.

1. 시장 질서 2. 한 집합의 교환 행위들 3.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의 경제 활동들 전체 4.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의 알뜰한 사용.<sup>3)</sup>

여기에는 돈벌이와 관련된 관념들만이 나오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인간의 살림/살이와 관련되어 있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정의의 기초가 되는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들을 찾아본다. 경제원론이든 미시경제학이든, 어느 책이라고 할 것 없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시작한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며 주어진 자원은 항상 부족하다. 이러한 '희소성'의 상황으로 인하여 인간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자원 활용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이 바로 경제이다.

즉 '경제화(economizing)' 행위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상호 작용이 바로 경제라는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이 정의를 뜯어보아도 여기에서 위에 정식화한 바의 살림/살이의 모습은 참으로 찾아볼 수 없다. 이 정의를 위의 살림/살이 경제의 정의와 비교할 수 있도록 조금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는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뜰하게 선택하는 행위.

좀 안된 이야기지만, 나의 경우 이러한 정의를 보았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고스톱이다.

---

하는 경향을 보인다. 폴라니 또한 비록 욕구 자체는 정신적 영성적인 것이라고 해도 수단이 '물질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실체적 경제를 정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살림/살이 경제의 개념은 사실상 인간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욕구도 정신적 욕체적 욕구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수단 또한 유형 무형의 수단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현실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구별은 계속 흐려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멩거나 폴라니의 본래의 뜻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확장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실체적' 경제를 인간 생활과 활동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향은 이미 캅(Karl William Kapp)의 저작에서 나타나고 있다. 멩거의 1923년의 2판 [일반경제학원리는 외국의 도서관에서도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편이지만 최근에 일본어로 번역된 바 있다. 「一般理論經濟学」八木紀一郎 外 訳, みずば書房, 1984.

3) *Routledge Dictionary of Economics*, 2nd ed., Donald Rutherford ed. (New York: Routledge, 2002)

명절 때마다 둘러서 쭈그리고 앉아 골똘히 고민하는 아저씨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러한 ‘선택’이니까. 들고 있는 패는 한정되어 있고 따고자 하는 점수의 상한은 무한대이니, 매번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이번에 어떤 패를 내서 무얼 먹어야 ‘흔들고 쓰리고에 피박’의 헤트트릭 대업(大業)을 이룰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으로 신년 초부터 머리들이 복잡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나가보면, 과연 이 정의가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가 의문스러워진다. 왜냐면 이 정의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데에 있어서 가장 알뜰하게 수단을 절약하는 선택’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에서 나타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전쟁에 나선 군대의 지휘관은 매번 전투에 부닥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인원과 물량을 어느 정도로 배치하는 것이 전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또 군주는 신민들의 복종과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느 만큼의 폭력과 어느 만큼의 시혜를 적절하게 섞어 써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게 된다.<sup>4)</sup> 지도 교수에게 아부를 바쳐야 하는 대학원생, 상대방의 애정을 얻어내려 기를 쓰는 구애자, 심지어 매주 교회당에 갈 때마다 현금 봉투를 채워야 하는 신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행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고민이다. 그런데 이 정의가 굳이 ‘경제’와 관련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위의 정의는 그냥 ‘불필요한 낭비를 삼가라는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한 마디의 단어를 추가하면 이러한 문제가 싹 해결되고 위의 정의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제의 정의로 둔갑한다. 그 단어는 바로 ‘돈’이다.

앞에서 본 경제학 교과서에서의 경제의 정의는 사실상 이미 ‘화폐’의 개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화폐의 개념이 없으면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여러 다른 수단으로 여러 다른 목적에 적절히 배분할 선택을 한다는 것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첫째, 여러 다른 목적들의 가치와 쓸모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 또 여러 다른 수단의 가치와 희생을 비교한다는 것은 모두 동일한 수량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스키장에 가서 백설 위의 청춘을 만끽할 것인가 골방에 처박혀 책이나 읽을 것인가? 베르그송(Henri Bergson)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통찰했던 바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베르그송이 지적하는 바, 우리는 흔히 꼬집히는 고통보다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엄밀히 보아 정확한 말이 아니다. 그 두 가지는 질적으로 다른 고통이기 때문에 이를 수량적 비율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물론 누구나 둘 중 하나를 당하라면 전자를 선택하기는 하겠지만. 스키장의 청춘과 골방 책벌레의 기쁨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즐거움이다. 이를 가상의 효용 단위인 ‘유틸(util)’로 환원하든 아니면 달러 가치로 환원하든 어쨌든 동일한 수량적 단위로 환원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는 수단의 상호 비교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다.

4) 그래서 울린(Sheldon Woolin)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폭력의 경제학”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다. 또 정복자들에게는 피정복지역의 주민들을 어느 만큼이나 학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가의 계산이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 예를 들어 징기스칸의 경우 도시를 침공할 때에 먼저 전령을 보내어 항복을 유도하고 항복할 경우에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으며, 저항할 경우에는 도성(屠城) 즉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사마르칸드를 점령했을 때에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죽여 버렸다. 이는 장기적으로 군단 이동의 속도를 최대한 올리고 폭력 행사에 따르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고려가 있었다고 한다.

둘째, 수단이 여러 목적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위의 경제의 정의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바이올린으로 배를 불릴 수는 없고 장미꽃으로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수단들의 가치와 희생의 크기를 동일한 수량으로 환원한다 한들, 바이올린, 장미꽃, 성경책, 연예인 사진 등 가지각색의 수단으로 구성된 '수단 바구니'를 들고서 이런 저런 목적에 아무렇게나 배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모든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수단'들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무 목적이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란 모든 마법을 다 똑딱 해치울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나 니벨룽겐의 반지 같은 전설의 물건들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에도 이 도깨비 방망이나 니벨룽겐 반지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돈'이다. 마르크스가 인용하는 피테의 구절처럼, 돈은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sup>5)</sup> 그래서 위의 두 번째 경제의 정의가 보편적인 인간 활동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수단'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정의에는 사실상 돈의 개념이 잠재되어 있고, 또 그렇게 돈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삽입한다면 최소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경제'라고 느끼는 것의 일단을 훌륭하게 묘사하는 정의가 될 수 있다.<sup>6)</sup>

이렇게 되면 경제는 돈을 매개로 한 두 개의 층위로 다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현실에 존재하는 가지각색의 인간 활동과 유형 무형의 자원을 '수단'으로 보아 이를 '돈벌이'라는 목적에 맞게 가장 현명하게 배치하는 선택이 있다. 둘째,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수단'으로 보아 여러 '목적'에 배당하는 선택이 있다. 첫 번째 과정을 보통 '생산'이라고 부르며 두 번째 과정을 보통 '소비'라고 부른다. 그런데 두 번째 과정의 여러 '목적' 가운데에 또 다시 '돈벌이'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를 우리는 '투자'라고 부르며, 전체 과정은 돈벌이라는 '목적'에 맞게 돈이라는 '수단'을 적절히 배치하는 활동이 되기도 한다(이를 자산 선택 즉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등등. 이렇게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를 묘사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비로소 속속 도출되기에 이른다. 결국, 이 두 번째 정의는 돈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넣었을 때에 비로소 경제의 개념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택'의 관점도 최소한의 돈을 써서 최대한의 만족과 또 추가적인 돈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줄여서 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두 번째 정의에서 묘사되는 경제는 '돈벌이 경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마르크스가 인용하는 피테의 구절에는 '돈만 있으면 꼬부랑 할머니도 미녀로 바뀌고...'하는 구절이 있다. 마르크스나 피테의 시절에는 사실 이것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 구절은 사실상 돈 많은 과부라면 모든 남자들이 눈 딱 감고 절세 미녀보듯 아부를 바친다는 뜻이었으니까. 하지만 현대에는 글자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 강남의 지하철 역 곳곳에 붙어 있는 '성형강국 코리아'라는 광고 문구를 보라.

6) 이를 명시적으로 분명히 한 업적은 마샬(Alfred Marshall)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화폐적 차원과 한계 효용의 차원의 관계를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처리했던 초기의 한계 효용 이론가들과 달리 마샬은 '화폐의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설명 체계를 이루었다.

## 상품화: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의 중첩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경제가 동일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즉, 살림/살이의 문제는 바로 돈벌이의 문제인가? 돈을 벌면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서 자란 우리들은 직감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하고픈 충동을 느낄 것이다. 돈 없이 살림/살이 자체가 되질 않아서 가족이 뿔뿔이 해체되는 비극은 지금도 달동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돈만 충분히 벌어놓으면 그 전에는 꿈꾸기 힘들었던 각종 욕구의 충족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욕구를 끝없이 발견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살림/살이가 열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의 현실이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서 그 반대 방향의 질문으로 가보면 그렇게 쉽게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돈벌이의 문제는 바로 살림/살이의 문제인가? 살림/살이를 잘해나가면 돈은 저절로 벌리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돈을 많이 쟁여놓는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살림/살이의 문제는 얼마든지 있으며, 살림/살이를 아무리 훌륭하게 한다고 해도 돈이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가 중첩되는 영역이 대단히 넓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림/살이로서 경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도 곧 결국 부동산 주식 등 돈벌이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인간 본성에 근거한 필연적인 것이라든가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인간 세상에 항상 적용되는 진리인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두 개의 영역이 중첩되게 된 것은 ‘상품화(commodification)’로 인해 벌어진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즉,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적 자연적 요소들은 물론 화폐나 법적 권리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까지 모두 화폐를 통해서 얻고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의 형식을 띠고 있는 상태에서는 살림/살이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돈벌이의 문제와 중첩될 수밖에 없다.

이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 근대 사회의 특징은 ‘신분(status)에서 계약(contract)으로’의 전환에 있다는 법사회학자 메인(Sir Henry Maine)의 고전적인 언명을 잠시만 음미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신분 사회의 위계 조직은 단순한 사회적 정치적 서열과 권력 관계를 고정시켜놓은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동 분업 또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조직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 모든 성원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유형 무형의 수단들은 이러한 신분 관계의 작동 속에서 분배되고 생산되어왔다. 그런데 신분이라는 관계 대신 현금 관계(cash nexus)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옛날의 신분적 위계 조직 안에 ‘묻어들어(embedded)’ 있었던 노동 분업 또한 튀어나와서 화폐를 매개로 한 계약이라는 방식으로만 분배와 생산이 조직되게 된다. 즉 ‘상품’의 옷을 입고서 분배되고 생산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사회의 노동 분업에서 주변적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가 우선 상품화되었지만, 산업 혁명과 기계제 생산이라는 대변혁을 겪게 되면 이제는 인간 노동, 자연 자원, 심지어 화폐나 법적 권리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까지

모두 마치 상품인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되고 그 가격도 결정되는 상태에 이른다. 이른바 폴라니(Karl Polanyi)가 말하는 '허구적 상품'들까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간, 자연, 사회까지 모두 상품화가 완결된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인간 세상의 만사만물에 대한 보편적인 상품화가 현재까지 갈수록 폭을 넓혀가고 있다.

사람, 자연, 사회적 권리 및 권력까지 상품이 되어버린 상태이니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 중 돈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도무지 조달할 수가 없게 된 것들의 경계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날에 이르면 앞에서 말한 대로 '움직이면 돈이다'라는 구호가 모든 이들의 의식 속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 오늘날 상품화의 영역은 몇 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지경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도 최소한 당분간은 상품화의 진전이 가속화될 것이며, 돈벌이의 영역과 중첩되게 되는 살림/살이의 영역 또한 점점 늘어나게 될 듯싶다.

하지만 그러한 중첩의 범위는 결코 미리 어떤 선형적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며, 또 역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사회 전체의 구성 - 정치적 사회적 조직과 문화적 의식 - 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극히 가변적이며 급격하게 변하기도 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이번 주에 온 식구가 모여 저녁 밥상을 함께 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가? 내가 강연을 다니면서 이 질문을 해보면 2번 이상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보통 청중석에서 50명 중에 3명을 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숫자는 0번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불과 이삼십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80년대만 해도 아버지가 늦으시거나 대학생 오빠 누나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결코 매일은 아니었다—를 빼면 기본적으로 저녁은 집에서 먹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였다. 이를 실증할 데이터는 손에 없지만, 정황적 증거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렇다. 내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70년대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반공 교육의 중요한 레퍼토리 하나는 '밥공장'이었다. 북한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므로 집에서 밥을 먹는 법이 없으며 따라서 밥공장에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전하던 선생님의 태도나 이를 전해들은 우리들의 반응 방식이나 모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식이었음을 기억해볼 때, 이는 곧 기본적으로 밥은 집에서 해먹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때까지만 해도 통념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생활 패턴과 도시화와 노동 관계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요식업의 폭발적인 팽창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심지어 휴일이 되어도 오히려 온 가족이 집단으로 밖에 나가 외식을 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행동이 되었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이들은 극히 줄어들었고, 식사는 이제 당연히 돈 주고 밥집에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sup>7)</sup>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어보자. 저녁밥을 조달하는 행위는 살림/살이의 영역인가 돈벌이의 영역인가? 식자재가 조달되어 있다면, 이를 어머니 혹은 가족 누군가가 식단을 짜고 조리를 하는 활동으로

7) 아마 이러한 음식 문화를 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짜장면과 탕수육의 위상 변화일 것이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음식은 어쩌다 함께 먹는 별미였고 탕수육까지 시킬 때는 상당히 잔치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이는 피자나 치킨('통닭') 등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날 외식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평범 진부한 것으로 되어 버렸다.

저녁밥이 조달되니 이는 앞의 두 정의의 경제로 볼 때 분명 살림/살이 영역에 해당하던 일이다. 하지만 저녁마다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무얼로 배를 채워야 할꼬라는 고통스런 질문을 안고 가격 대비 품질 영양 음식량 등을 놓고 ‘희소성 아래에서의 선택’을 하기 위해 식당가를 헤매 다녀야 하는 이들은 이를 돈벌이 경제의 영역으로 바라볼 것이다. 전자라면 GDP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며, 후자라면 GDP에 나의 소득 지출과 밥집 아주머니의 소득 발생으로 포착될 것이다. 문제는 그 저녁밥이 상품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은 상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으로 내게 품어주시는 선물이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식당에 가서 내가 먹는 삼겹살은 ‘푸줏간 주인의 선의(善意)에서가 아니라 그의 이기심의 발로로’ 제공된 상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의 영역이 본래 다른 것이며 그저 상품화의 정도에 따라 그 둘이 중첩되는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 둘이 완전히 중첩되어 하나로 통일될 정도로까지 상품화가 진행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거나,<sup>8)</sup>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한 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직접적으로 상품화와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일이 가능할 정도의 사회에 가장 근접한 모습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에 그려진 사회일 것이다. 오만 가지 선전과 사회 관리 기법은 물론 아예 유전 공학을 활용한 맞춤형 인간 생산 기법까지 활용한 이 사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욕구’가 정밀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그것을 충족할 모든 유형 무형의 수단’들이 중앙 계획에 의해 미리 그 질과 양이 예측되고 조달되고 있으니, 만약 이 사회에서 화폐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면 살림/살이와 돈벌이는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는 아마도 그 근처에도 근접할 수 없을 것이다. 상품화가 제 아무리 폭넓게 진행된다 해도 인간의 삶에는 항상 돈을 써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영역이 남아 있게 될 것이며, 이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 무형의 수단은 돈벌이 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sup>9)</sup>

그렇다면 여기에서 심각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돈벌이 경제와 중첩되지 않는, 오롯이 살림/살이 고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돈벌이가 아닌 살림/살이는 어

8) (신)고전과 경제학이 이를 상징하는 경우에 대해 이를 이론적 차원에서도 ‘유토피아’에 불과하며 결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칼 폴라니의 고전 [거대한 전환]의 주요 논지이다. 마르크스경제학의 경우에는 [자본론]에 서처럼 인간 노동이 완전한 추상 노동 시간으로 상품화된 경우를 상징하고 있거니와,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카스토리아디스와 [사회주의나 야만이나] 그룹의 집단 연구에서 강력하게 기된 바 있다. Cornelius Castoriadis, “Modern Capitalism and Revolution” in *Political and Social Writings, 1955-1960*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Press, 1990).

9) 칼 폴라니는 결코 이렇게 두 영역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일은 아예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사회의 보편적 상품화가 진행될수록 이것이 사회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사회를 보호하고 상품화의 진전을 막는 일종의 길항(拮抗) 작용인 ‘이중적 운동(double movement)’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길 참조. 21세기에 들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순히 자발적으로 상품화의 현실을 환영하며 맞아들이고 있는가의 현실을 보면 폴라니가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나친 상품화에 대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떠한 원칙과 원리로 풀어내야 하는가? 여기에서 돈벌이 경제학이 아닌 살림/살이 경제학이 필요하다. 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은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상 돈벌이 경제학에 불과하다. 선택을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많은 만족 얻는 법을 가르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지어 가장 발달된 자본주의 한복판이라 할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삶에도 여전히 돈벌이로 해결되지 않는 살림/살이의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개인의 삶으로 보자면, 나의 결혼 상대는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나에게 맞는 직업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노후 시간을 보낼 삶의 방식은 어떻게 계획해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나의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들로 키워야 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수단과 방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가? 집단적인 차원으로 가면 더욱 문제가 많아진다. 사람들의 삶에 가장 쾌적하고도 지속가능한 자연 환경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떠한 교육 체제가 사회 성원들 모두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도 활발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인가? 작업장 환경과 노동 문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아와 출산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것에 필요한 수단은 어떻게 발견하고 조달할 것인가?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그저 화폐로 계산되는 바의 '경제화(economizing)'라는 원칙 하나만으로 제대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사라질 성격의 것들도 아니다. 위의 문제들은 전통적 사회에는 오히려 대두되지 않았거나 개인적 개별적 해결에 맡겨두는 식으로 풀었던 것들이지만,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산업 사회라는 새로운 조건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절로' 풀어주거나 아예 발생시키지도 않았던 전통적 삶의 방식이 해체되면서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살림/살이 경제학의 제기는 너무 돈만 앞세우는 세태에 맞서 옛날의 전통적 도덕적 가치를 복원하자는 소극적이거나 낭만주의적인 푸념이 아니다. 산업 사회가 진정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도록 조직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도 놀랄 만큼 제대로 발전되지 않고 있는 학문이다.

## 합리성과 돈벌이 경제학

그런데 살림/살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전에 먼저 다루어야 할 질문이 있다. '살림/살이 경제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해도, 경제 계산이 가능해야 이를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 질문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이 중요하고 그 대답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살림/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 계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진다. 작은 규모에서의 경제 활동 예를 들어 친구들과끼리 돌아가면서 점심을 산다든가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달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는 숫자를 통한 계산 즉 회계(accounting) 활동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 활동의 규모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게 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경제 행위와 자원을 숫자로 바꾸어 즉 화폐로 환산하여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살림/살이 경제에 있어서도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최소한 ‘계산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돈벌이 경제의 필연성을 도출하는 논리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돈벌이 경제란 특별한 종류의 영역에 국한되는 특별한 종류의 경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 합리성이며, 살림/살이 활동이라고 해도 결국 일정한 규모에 달하게 되면 돈벌이 경제학의 관점으로 다룰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돈벌이 경제학은 모든 경제 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보편적 합리성을 정형화시킨 것이며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발견한 19세기 유럽인들의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들은 살림/살이 경제 (독일 역사학과의 용어로 “자연 경제(Naturalwirtschaft)”)는 반드시 화폐 경제 혹은 신용 경제로 진화해나가게 되어 있다는 경제사의 진보사관을 낳았으며, 이는 좌파건 우파건 할 것 없이 현대 경제학을 지배하는 사고 방식이 되었다. 즉, 살림/살이 경제란 ‘미개한’ 혹은 ‘저발전’ 단계의 경제에 불과하며 돈벌이 경제는 더 우월하고 더 보편적인 경제 형태이므로 역사적인 경제 발전의 목적지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은 무척 복잡하고 무거운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논지에 있어서는 간단히 다음의 문제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 계산의 필연성’과 ‘돈벌이 즉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라는 두 가지 별개의 문제를 하나로 혼동한 것에 문제가 있다. 내가 ‘돈벌이 경제’ 그리고 ‘돈벌이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단위로 하여 경제적 계산을 하는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게 살림/살이를 기획함에 있어서도 다종다기한 계산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것이 돈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또한 물론이다. 계산상의 합리성은 인간 만사 어디에나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산상의 합리성을 **유일무이의 합리성**으로 여기고,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가장 적은 투입 (화폐로 계산된) 으로 가장 많은 산출 (화폐로 계산된)을 낳는 사고 방식 즉 **최대의 이윤을 창출한다는 원리** 하나만으로 인간 만사를 조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행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돈벌이 경제라고 부르는 것이며, 또 그것을 하나의 정상적 규범으로 여겨 이론을 구성하는 경제학을 돈벌이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전통적 경제가 아닌 복잡한 산업 사회에서의 경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집단적 차원에서도 고도로 정교화된 계산 행위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상의 합리성 이외에도 여러 다른 차원에서의 합리성이 병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차원의 합리성은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합리성 이외의 합리성의 차원을 갖게 마련이다. 이러한 복수의 여러 합리성은 때로는 이윤 극대화 차원의 합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될 수도 있고, 독자적인 차원에서 계산적 합리성에 의미와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요컨대, 당기 순이익과 자산 증식을 목표로 짜여진 기업

회계 이외에도 여타의 사회적 목표와 합리성을 조직 원리로 하여 새로운 범주로 구성된 이를테면 사회적 회계(social accounting) 같은 것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려해야 할 여러 다른 합리성들을 찾아내고 서로 견주어보는 합리성이 바로 살림/살이의 합리성이라는 것이다.

경제 행위에서 이 합리성이 갖는 여러 차원을 명시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사람이 아마도 막스 베버(Max Weber)일 것이다. 그는 '형식적 합리성'과 '내용적 합리성'을 뚜렷하게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 활동에서의 합리성에는 형식적 합리성 이외에도 내용적 합리성이라는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형식적 합리성은 목적-수단 관계에서의 합리성(Zweck-Mittle Rationalität)이며, 결국 화폐를 사용한 수량적 계산의 합리성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베버가 강조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형식적 합리성은 영리 기업이나 고리대업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단순히 계산상의 합리성에 멈추지 않고 그렇게 숫자로 파악된 전체의 증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합리성, 즉 자본 회계의 합리성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내용적 합리성이란 가치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차원에서의 합리성이다. 즉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왜 추구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합리성이다. 이 두 개의 차원에서 합리성이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이므로 혼동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느 쓰러져가는 대가집에서 막내딸을 결혼시킨다고 하자. 뽕을 기둥뿌리는커녕 당장 생계도 잇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도, 그 대가집의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런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형식적 합리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전혀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 성원이 자신들의 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의 더욱 극적인 사례도 있다. 몇 십 년 전 어느 세계적 자동차 회사에서 실제로 벌어져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일이다. 그 회사가 새로 개발한 모델의 자동차가 브레이크에 설계상의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경영진 또한 이 점을 인지하였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립 라인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비용과 사고가 날 확률을 감안한 예상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을 재어 본 뒤 조립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인명의 사상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보면 실로 어처구니없는 짓이겠으나,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 회계의 형식적 합리성에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행위이다.

오히려 더욱 흥미로운 질문은, 이렇게 인간 행위에 공존하는 여러 가지 합리성 중의 하나에 불과한 계산적 합리성 나아가 자본 회계의 합리성이 어쩌다가 다른 모든 합리성을 압도하는 절대지존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이다. 그리하여 인생과 사회의 만사만물을 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측량하고 실제로 동원하게 되는 돈벌이 경제의 행태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19세기 말 이후 베버, 쾰바르트, 짐멜, 베블린, 루카치 등 수많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대가들을 끊임없이 매료시킨 질문이었다. 쾰바르트는 이러한 "자본

주의 정신”이 어떻게 출현하여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대저 [근대 자본주의(*Der Moderne Kapitalismus*)] 여섯 권에 걸쳐서 풀어내었으며, 베버의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 논문 또한 근본적으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철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에 걸친 이들 연구의 큰 함의는, 이런 식으로 돈벌이의 합리성이 온 세계를 지배하여 최고의 합리성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인간 세상의 제도, 사상, 종교, 문화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가장 간명하게 이 돈벌이 경제의 합리성에 대해 내린 대답을 우리는 미국의 제도주의 경제학자였던 미첼(Wesley C. Mitchell)의 저작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현대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즉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행동하는 인간이란 결코 초역사적인 인간의 행태가 아니며, 그것 자체가 근대적 회계, 주식회사, 근대 은행, 자본 시장 등등의 화폐적 제도들(pecuniary institutions)이 출현한 결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흔히 경제학자들(특히 소위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듯이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거꾸로 화폐적 제도들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합리성이 출현했다는 것이다.<sup>10)</sup>

인간 세상에서 특히 고도로 발전된 산업 사회에서 경제적 계산은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살림/살이의 경제 또한 일정한 규모에 이르게 되면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계산의 합리성이 돈벌이 경제(학)의 조직원리인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합리성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인간 세상에는 돈벌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학 또한 필수불가결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윤의 극대화라는 돈벌이의 합리성이 유일무이의 경제적 합리성은 결코 아니며, 지배적인 합리성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이 살림/살이 경제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독자적 합리성을 탐구하는 살림/살이 경제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다.

---

10) Wesley Mitchell, “The Role of Money in Economic Theory” in *The Backward Art of Spending Money* (New York: August M. Kelley, 1937)

